

60th
ANNIVERSARY
대한민국 문화플랫폼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정부 지역문화정책 진단과
지방문화원 비전**

국회의원 박정



한국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s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김태웅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박정 국회의원님과 공동으로 '정부의 지역 문화 정책 진단과 지방문화원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고,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주신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국민의 힘 이용호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 정향미 지역문화정책관님과 전국 각지에서 먼 걸음해 주신 지방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947년 강화문화원을 시작으로 우리 지방문화원은 각 지역 사회의 고유 문화에 주목하고 굴곡진 역사 속에서 황폐해진 지역의 문화 환경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 문화를 통한 위로와 치유 그리고 발전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은 우리가 갖고있는 문화의 힘을 모으고 그 울림을 크게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방문화원이 갖는 고유의 특성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 지방문화원이 지방문화 발전의 중심 공간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 문화 발전의 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영역은 마이너도 메이저도 없습니다. 작은 문화도 큰 문화도 없습니다. 지역과 지방의 문화는 분명 한국문화의 하위문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위문화가 결코 덜 훌륭하거나 그 중요성이 덜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영역은 오히려 마이너리티의 힘이 폭발하는 공간입니다. 각각의

하위문화가 고유성을 갖고 발전할 때 전체 문화의 힘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분권’이란 각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가 어울리면서 우리 문화 전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식의 성과주의적 정부 주도 문화 사업이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부정적 한계를 갖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문화원의 역할은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문화원의 운영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지방문화원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지만, 기획재정부 소관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오히려 보조금 제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화원 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2015년 1월 1일 이후, 지방문화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예산 지원이 폐지됨으로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조례’가 제정되어있지만, 행정안전부의 ‘지방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는 지방문화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있어 예산 배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이 올곧이 우리 문화의 힘을 키우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관계자 분들께 우리 문화원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장실 전 국회의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개최하는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전국 지방문화원이 대한민국의 지역문화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31.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 태 응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방문화원 문화가족 여러분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공동이익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크게 이바지해 온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국회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 모두가 균점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하여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각 지방의 고유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17년 1월,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해,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같은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18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국 지방문화원의 원천콘텐츠 발굴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향토문화 자료 목록화 140만여 건과 데이터베이스 70,968건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향토문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연합회 창립 60년 기념 정책세미나의 주제를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진단과 지방문화원 비전」으로 선정하여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향후 지방문화원의 역할 강화를 대비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문화원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온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님과 231개 지방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 8. 31.

국회의원 박 정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정부 지역문화정책 진단과 지방문화원 비전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1962.8.8.)을 맞아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회는 정부의 문화정책 진단 및 문화원의 역할과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 발전의 動力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일 시 : 2022년 8월 31일(수) 14:00~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주관 : 국회의원 박정 · 한국문화원연합회

■ 세부 일정

개 회 식			
14:00~14:30	개회사	김태웅(한국문화원연합회장) 박 정(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축 사	홍익표(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용호(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윤덕(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주제발제			
14:30~15:30	주제 발제	(주제 1)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진단 및 개선 방향 이대영(중앙대 예술대학원 원장/교수)	
		(주제 2) 지방소멸 시대, 지방문화원 역할과 비전 장 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종합토론			
15:30~17:00	좌 장	김장실(제19대 국회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토론	주제1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주제2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김성하(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종합토론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17:00~17:10	질의 응답		
	폐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정부 지역문화정책 진단과 지방문화원 비전

[발제세션]

- 발 제 1**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진단 및 개선 방향 3
이대영(중앙대 예술대학원 원장/교수)
- 발 제 2** 지방소멸 시대, 지방문화원 역할과 비전 27
장 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토론세션]

- 토론 1-1** 문화부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방향과 과제 53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 토론 1-2** ‘총체·융합·특화·가치’ 지향의 지역문화매력 정책 브랜딩을 위하여 ... 61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1-3** 지역문화의 가치창조체계를 위한 참여적, 융합적 지역문화정책체계 구축 ... 69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 토론 2-1** 지역중심시대, 지역문화원의 역할과 비전 73
김성하(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 토론 2-2** 지방소멸시대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과제 79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 토론 2-3** 지방문화원의 존재가치 - 지난 60년, 그리고 앞으로 60년 83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발제세션

**[발제 1]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진단 및 개선 방향**

이대영(중앙대 예술대학원 원장/교수)

[발제 2] 지방소멸 시대,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비전

장 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 제 1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진단 및 개선 방향¹⁾ -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

이 대 영(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목 차

- I. 서론, 왜 지역문화진흥인가?
- II. 본론
 - 1. 대한민국의 역대 문화정책 분석과 윤석열 정부의 새 문화정책
 - (1)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개괄
 -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새 문화정책 개괄
 -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변화 및 윤석열 정부의 과제
 - (1) 지역문화 정책의 시발과 변화
 - (2)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의 과제
 - 3. 지역문화진흥 및 한류문명 발화를 위한 두 가지 제언
 - (1) 문화 뉴딜과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 (2) 문화센서스를 통한 문화중산층 확대
- III.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추진체계
 - 1. 정책추진 스토리텔링의 개괄적 이해
 - 2. 스토리텔링 전략에 의한 정책추진의 예시
- IV. 결론

I. 서론

역사상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던 제국들은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문자와 기술과 법률 시스템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철학과 예술을 통해 정신문화를 꽃피웠다. 창조적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획득하고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며 세력을 확대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원리는 다르지 않다. 최초의 창안자(創案者)는 언제이든 자신이 만든 방법을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방자(模倣者)는 창안의 원리를 알 수 없어 새로운 '무엇'이 탄생 될 때까지

1) 줄고(拙稿) 「한류문명 발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연구」, 『새로운 오래된 비전』(기파랑, 2017)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기다려 그 기술을 받아들였다. 저개발국가들은 선진화된 문명 시스템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창안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궁리하고 연구했다. 그렇게 새로운 창안자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고 또다시 소멸하며 지구촌의 역사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역사의 모방자 위치에서 창안자의 위치로 올라서고 있다.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이 인기를 끌며 OTT 콘텐츠를 이끌고 있다. 한국의 오래된 놀이가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다. 물론 「대장금」, 「겨울연가」, 「태양의 후예」 등의 드라마가 기초를 닦았다. 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BTS는 팬클럽 아미(ARMY)와 함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클래식에서는 성악가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이 있고, 강수진과 엄재용 등 발레 분야에서도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스포츠에서도 손흥민 등 걸출한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소설가 한강은 소설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다. 허준이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Fields Medal)을 받았다.

이러한 한류 현상은 한국의 근·현대사 및 경제적 위상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1945년 일제 식민지로 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미·소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 뒤에는 공산 세력과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었다. 전후 잿더미에서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마침내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 됐다.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섰다는 뉴스도 낯설지 않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발맞춰 정치적 발전도 이루었다. 이른바 '87 시민항쟁'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실현했다. 제6공화국의 출발이다. 이후 19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며 군(軍) 출신이 아닌 민(民)의 정치로 옮겨진 이후 1997년, 2007년, 2017년, 2022년 올해까지 4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치·경제적 성장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한국을 알고자 하는 세계시민의 욕망에 부합한 것이 이른바 '한류'다. 아시아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대된 한국과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소프트파워인 대중문화 즉 한류로 시발(始發)한 시작된 것이다. 대중문화로 시작된 한류가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확보하게 되면 한류문명으로 발아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선결 조건이 있다. 우리의 문화원형을 체계화하고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그 첫 번째의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만의 역사와 오늘의 문화적 습속을 규정하고 우리네 삶의 목적과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국가의 문화정책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이를 잘 설명한다.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장 기본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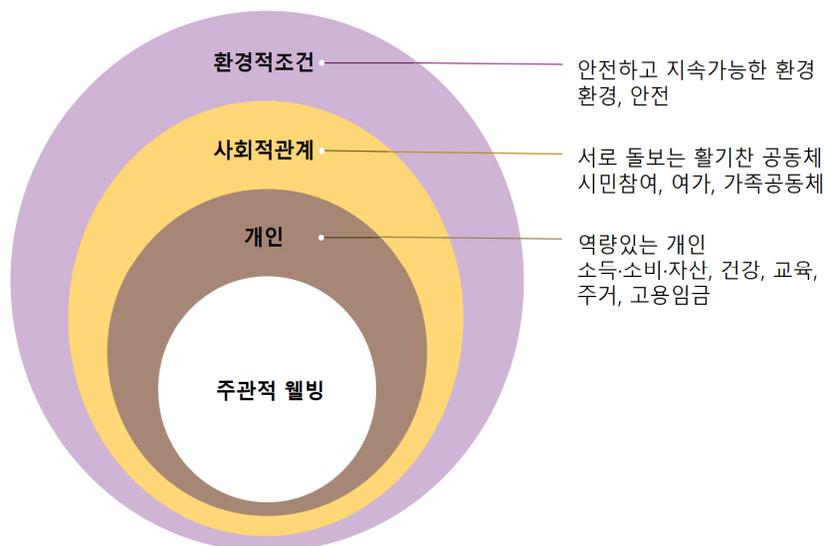
기본법에서 규정한 “문화”는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동법(同法)의 제3조는 개인의 “문화권”을 강조한다.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 할 권리를 갖는다. 나아가 문화의 가치를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명하고 있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국제법이든 국내법이든 법은 해당 지역 내 공동체 구성원이 지키고 누려야 할 사회적 규범과 제도와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문화권”이 있는 나라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과 같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화를 ‘도시화’로 착각하여 대도시 및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일화된 정책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목표와 자아실현과는 멀다. 개인 차원의 삶의 목표는 역량 있는 개인으로서 교육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제적 여유와 문화적 복지 혜택을 누리며 죽을 때까지 건강한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다. 개인은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오가며 사회적 관계망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이 관계망의 이름은 ‘서로 믿고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이다. 개인은 여가 및 취미활동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며 신뢰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를 갈망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조건 즉 전쟁과 테러와 공해 및 자연재해 등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다 ‘지속 가능한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질은 이처럼 ‘주관적 웰빙’에서 출발하여 ‘개인’을 중심으로 프랙털 방식으로 외부 환경까지 확대된다([그림 1] 참조). 개인은 이러한 관계망 속에서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번민하고 갈등하며 실천하고 성취한다. 그런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삶의 질은 OECD 33개국 중에 32위(OECD, How’s Life 2022)이다.



* 자료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1)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p.11

[그림 1]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단계적 차원

삶의 질을 측정하는 11개 영역¹⁾을 자세히 다시 살펴야 하겠지만, 개인의 삶이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서 가족과의 유대 및 여가활동을 통한 문화적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개인의 사회 참여 의지 부족도 있지만, 국가의 정책이 거시적인 면에 치우쳐 개인의 삶에 밀착된 정책을 구현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문화정책은 개인의 욕구와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개인과 밀착된 지역문화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설계와 진흥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권리의 핵심 동력이다. 대도시이든 소읍이든 그곳에서 삶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대대손손 살아온 사람들의 문화적 전통과 습속이 정책 곳곳에 효과적으로 응축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의 삶에 근거해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런데 <표1>에서 보듯 국내 대표 문화지표로 연구된 40개²⁾ 항목을 보더라도 지역에 밀착된 항목이 빈약하다. 특히 2020년 지역문화실태조사의 32개 지표를 보면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 등 교통시설과 문화기반시설의 거리를 계상하지 않는 지표가 있다. 문화기반시설이 인구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나도 정작 먼 거리의 주민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논자는 그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문화지표 및 정책개발을 위해 지역별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센서스’를 주장해왔다.³⁾ 문화센서스 연구는 국가 설계의 지표에 있어서 모방자가 아닌 창안자가 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표1> 국내 대표 문화지표

구 분	문화지표 (40항)	
한국의 사회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사회보장통계 대표지표, e-나라지표 중 문화관련 지표 선정	GDP대비문화예산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보급 추이
	무대전문인력 배출 추이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공공도서관 수	학교문화예술교육 수혜율
	공연장/문예회관등문화시설 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등록박물관/미술관 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횟수
	공연/전시횟수	예술공간/도서관 이용률
	독서량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독서인구 수	여가시간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여가시간 충분도/만족도
	출판 현황	여가생활만족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하고 싶은 여가활동
	공능원 관람객 수	휴가활용(경험률, 사용일수)
	등록 문화재 현황	문화산업 규모/현황
	문화재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자국영화점유율 현황
	문화재발굴조사 현황	매체별TV프로그램시청경험비율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현황	가구 인터넷 보급률 및 컴퓨터 보유율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성 및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유네스코 유산 현황	성 및 연령별 인터넷이용률과 이용시간
	전통사찰지정 등록 현황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p.218

- 1) 삶의 질 지표체계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가족공동체, 건강, 교육,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환경, 안전 등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 2) 연수현 외,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3) 문화센서스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보고는 한류문명의 발화를 위해 지역문화가 왜 중요하고, 또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어떻게 문화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하는지 등 ‘스토리텔링에 입각한 지역 문화 정책추진’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문화정책의 핵심전략을 먼저 살필 것이다.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섰고,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및 문화부 박보균 장관이 발표한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제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II. 본 론

1. 대한민국의 역대 문화정책 분석과 윤석열 정부의 새 문화정책

(1)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개괄

역대 정부별 문화 국정지표와 문화정책의 변동과정은 박광무의 『한국문화정책론』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시대별 변화과정을 대통령의 임기 중심으로 구분하였다.⁴⁾ 이것을 바탕으로 문화 국정지표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면 <표2>와 같다.⁵⁾

<표2> 역대 정부별 문화 국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의 수립과 미(美) 군정 학무국 및 공보부 시대(1945~1960) ② 문예 진흥을 위한 관련 입법 제정 등 문화정책 태동기(1961~1979)⁶⁾ ③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지방문화 육성 태동기(1980~1987) ④ 문화부 발족과 문화발전 준비기(1988~1992) ⑤ 역사 복원 및 문화산업의 태동기(1993~1997) ⑥ 문화산업의 진흥 및 문화복지 태동기(1998~2002) ⑥ ‘창의 한국’ 시스템 수립 및 문화도시 조성기(2003~2007) ⑦ 세계국가로서의 선진 문화국가 구현기(2008~2012) ⑧ 국정목표로서의 문화융성 채택과 문화복지 확대기(2013~2017) ⑨ 문화주권 및 문화분권 추진기(2018~2022)

* 자료 : 박광무(2014) 『한국문화정책론』 p.60-63. 재구성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이승만 정부가 국립도서관과 박물관(1945), 국립극장(1950), 국악원(1950), 그리고 625전쟁 중에 학술원(1952)과 예술원(1952) 등 최소한의 국가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기관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4) 출간 시기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은 기술되지 않았다. 개정판에서 일부 첨가되었으나, 정부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보완하였음.

5) 박광무, 『한국문화정책론』, 김영사, 2014. 60-63쪽. 재구성.

6) 박정희 정부 시절이다. 공연·문화재보호법(1961~62), 영화음반법(1956~67), 문화재보수 5개년 계획(1964), 출판금고 설치(1969),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1974~78)이 수립되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의 시기로 공보부가 문화공보부(1968)로 직제 개편되었다. (위의 책, 표1-4 참조)

다. 박정희 정부는 문화재보호, 문화재 보수 5개년 계획, 출판금고 설치 등 문화재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보다 「문화예술진흥법(1972)」을 제정하여 법적 시스템을 확보에 나선다. ‘문예진흥 5개년 계획(1974~1978)’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도 앞장선다. 전두환 정부는 ‘문화발전 장기정책 구상(1986~2000)’ 등 중장기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86아시아게임, 88서울올림픽 등을 유치하며 민족문화의 국제적 선양에 나선다. 노태우 정부인 1990년에 문화부가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에 의해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한국예술종합학교(1991)도 설립된다. 김영삼 문민정부 때에는 ‘새 문화·체육·청소년 5개년 계획’이 설계되고, 말기에는 세계화를 위한 ‘문화복지 기본 구상(1996-2011)’이 수립되었다. 문화를 산업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문화산업국(1994)을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0월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을 발표하는데 특히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1999)」을 제정하고, 문화예산을 국가 예산 1%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문화정책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한국」을 만든다.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참여와 자치의 문화민주주의를 구상한다.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12’를 수립해 발표한다. ‘품격 있는 문화국가’를 기치로 선택과 집중, 실용과 효율,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문화바우처 등 핵심세부정책을 마련한다.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여 문화국가를 향한 미래정책을 펼친다. 이에 따라 문화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문화기본법(2014)」과 「지역문화진흥법(2014)」이 제정된다. 문화예산 2% 공약도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16일에 「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한다. ‘일 중심에서 쉬이 있는 문화’, ‘협력과 다양성의 문화’, ‘자치분권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바꾸어 가자는 의미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내세웠다. 자치분권 및 문화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정책 화두이다.7)

(2)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새 문화정책 개괄

2022년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약 두 달 뒤에 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섯 가지의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③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그것이다.

문화정책 분야는 셋째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대부분 속해있다. 대략 여섯 개의 과제로 압축된다. 첫째,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다. 문화를 통한 국민복지의 확대이다.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로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특히 문화자치로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를 확산하고 문화예술교육을 전 세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둘째, ‘예술인 지원체계의 확립’이다.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 있는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 및 예술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한다. 셋째,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인데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산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고급인

7)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부 자료실 참조.

력의 육성 및 문화산업 관련 기술투자를 확대한다. 넷째, '춤추는 스포츠 복지 실현'으로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며, 국제스포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생활체육의 참여율도 높이고, 스포츠 산업 시장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다각화'이다. 여행 및 레저 관련된 산업을 지원하고 가칭 '치유(治癒)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전통문화유산의 가치 재고'이다. 문화재를 재분류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분류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재 규제도 대폭 개선하고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재건하는 등 전통문화의 유지, 보존, 전승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오늘 정책뉴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10대 국정과제 자세히 보기

대한민국정부

〈표3〉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추진방향	① (자유) 자유를 기반으로, 독창성과 도전정신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② (공정)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림 ③ (번영) 문화를 통해 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리더국가 역할 확대
핵심추진과제	(1단계)국민 품으로 → (2단계)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도약, K-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의 공정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지역균형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2) 「새 정부 문화정책(0721)」

이러한 인수위의 국정목표 및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문화부의 새 문화정책이 지난 7월 21일 공개된다. 박보균 장관의 대통령 업무 보고 형식을 통해 발표된 문화정책의 기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⁸⁾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추진과제가 설정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역사가 깊은 청와대를 국가 핵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도 담겼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새 문화정책이 문화, 예술, 관광, 종무, 콘텐츠, 여가, 스포츠, 전통문화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관행적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획기적으로 눈길을 끄는 정책과제가 없는데 이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비슷하다.⁹⁾ 그 까닭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욕구’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의 일부 수정 보완은 있을지언정 파격적인 정책은 자칫 국민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므로 한번 시작한 뒤에는

8)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새 정부 문화정책 (0721)」 참조.

9) 대한민국의 21세기 문화정책에는 봉우리 분기점이 둘이 있는데 “창의한국”을 설계한 노무현 정부와, “문화융성”을 국정목표로 삼고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한 박근혜 정부가 그것이다.

중단할 수가 없다. 기존에 재정적 지원을 받던 개인과 단체, 학회와 협회 등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들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 이것이 결정적인데 - ‘문화정책에 대한 근본적 인식 부족’ 때문이다. ‘문화’가 ‘예술’과 결합하면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가 상용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제정, 1995년 전문개정)」에 기인한다. 동법(同法)은 문예진흥을 위하여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20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했다.¹⁰⁾ 그러나 문화와 예술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문화정책과 예술 및 콘텐츠 정책은 형태론적 접근법부터가 다르다. 국가의 문화정책이란 전 부처를 통괄하는 내재적 문화 시스템을 뜻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문화, 국방문화, 공무원문화 등 일종의 문화적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오래도록 유전(遺傳)된 습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부가 주관하고 있으나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실천해야만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사실은 사회·교육 부총리가 아닌 문화·교육·사회 부총리 직제가 되어야 온전한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 문화융성의 토대¹¹⁾가 그렇게 출발하였고 문화융성위원회는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처럼 전 부처 장·차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나 문화부의 과도한 욕심과 불행한 사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本考)에서 논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진흥정책도 윤석열 정부 5년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과거의 구습과 구태를 벗고 미래지향적 습속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문화정책 유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대정신을 접목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인과 세계를 겨냥해야 한다. 단기간에 실효와 실적을 거두겠다는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변화 및 윤석열 정부의 과제

(1) 지역문화 정책의 시발(始發)과 변화

대한민국의 지역문화 정책만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논의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는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법(同法)은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하여 행하는 지방문화사업을 보호·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이에 따라 지역 문화사업의 거점 역할을 해당 지역에 본거지를 둔 지방문화원이 맡게 된다. 이후 약 30년 뒤에 문화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각 지역에 문화원을 두고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을 명문화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1994)」이 제정되면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소멸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는 지역의 문화원의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준다.¹²⁾

10) 현재 문화의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10월 셋째주 토요일로 변경되었다.

11) 필자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목표인 문화융성의 기초 방안을 그렇게 설계하였다. 문화정책의 수직적 구조는 문화부가, 수평적 구조는 총리실에서 주관하여 전 부처가 협력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설계를 하였다.

12)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표4〉 정부별 지역문화 정책 및 문화분권

구분	김대중정부 (1998~2002)	노무현정부 (2003~2007)	이명박정부 (2008~2012)	박근혜정부 (2013~2017.3.)	문재인정부 (2017.5~2022.5.)	
지역문화 정책접근	-균형발전 -사회통합	-균형발전 -지역문화역량제고	-지역협력 -실용적 역할분담	- 지역문화 자생력 - 생활문화형 정책	-문화자치와 분권 -포용/혁신	
정책 계획	문화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	-창의한국	-문화비전 2008~2012	-문화가 있는 삶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지역 문화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		-제1차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제2차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법제				-지역문화진흥법제 정(2014.07.29.)	
	추진 기구	-문화관광부 예술국 전통지역문화과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지역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 지역문화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과('09~)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민족문화과 (‘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민족 문화과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 정책관 지역전통문화과 (‘1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 정책관
주요시책	-2003년까지 지역문화재정 5% -지역 간 공동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특성을 살린 '시범 문화의 거리' 조성 -특화도서관 건립 -시·군·구 문화원 확대	(창의한국 中) -지역의문화역량 제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문화정보체계 구축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지역문화활성화대책)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확대 -민·관·학 연계 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체계 정립 -지방문화원 육성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	-지역문화공간 확충, 서비스 확대 -지방문화원 거점화 -생활공감형 문화정책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지역순회공연 지원(방방곡곡) -지역생활문화 축제 등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순수예술지원 방식 개선 및 지역 협력 확대 (4대방향) -지역근대산업 유산 활용 문화공간 및 문화도시 조성 -지역기반의 콘텐츠기업 창업활성화 -지역관광산업 지원 체계 구축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문화가 있는 삶 中) -문지역활성화 및 지역문화지표 개발 -지역문화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문화기관간 '지역문화협의체' 구성 -컨설팅 지원 -지역협력형 지역문화 기금 확대 -지역사업 평가 강화 -지역문화 매개 인력 처우개선 -‘문화여가사’ 자격증 도입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가 있는 삶 -지역에서꽃피는 문화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남북의 통로가 되는 문화 -문화진흥기반구축	(문화비전2030 中)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 및 발전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계기 제공 -중앙과 지방 간 협치 모델 설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민의 참여로 문화 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문화관광을 통한 기초 단위 마을 살리기 운동	-지역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문화분권 평가	지역문화사업 본격 추진, 중앙정부 소규모 일회성 사업 중심	국가 직접사업 기획방식에서 지역문화기반마련 중요성 인지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협력하는 대상으로 접근, 지역 자생력중시	지역자율과 상생발전을 표방, 이전정부정책 지속	문화자치 실현 강조, 정부 간 관계와 행정체계 중시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p.19

지역문화진흥은 이처럼 박정희 정부 때에 초석이 다져지는데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이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1972)」이 제정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집중적으로 지역의 문화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에 문화부가 만들어지면서 국가 주도형 문화정책은 정점에 오른다. 당시에는 시·도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므로 국가 중심의 강력한 문화정책이 지역의 문화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자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주민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체적 의지와 욕망이 분출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자치분권의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의 가치와 비전, 추진의 방향 및 핵심정책 등이 함께 설계된다. 그렇게 지역문화 정책도 변화를 겪는다.¹³⁾ 이른바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¹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¹⁵⁾

1.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이를 계기로 경기문화재단(1997)을 필두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지역문화재단이 속속 설립된다. 지역문화재단은 해당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¹⁶⁾ 지역문화재단 대표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직접 참여하여 통할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문화원이 종래 수행하던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대부분 혹은 일부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된다. 지역문화진흥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문화원과 지역문화재단

13) 정보람,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14) 지방자치법의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와 예술교육 및 체육의 업무도 실시할 수 있다.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15) 지역문화진흥법 제1장 제3조.

16) 김창규,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공법연구』(제42집 제4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4년 6월. 148쪽.

과 예술인단체가 그 역할을 나누고 지역문화재단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의 문화정책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자치구까지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2021년 현재 광역 시도 17개 전체, 그리고 기초자치구에는 100개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문화자원, 문화시설, 문화생산, 문화기획, 문화인력 등 생태계가 서울 및 권역의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문화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나아가 도시 중심의 선행 정책이 농산어촌까지 무분별하게 지역에 이식되고 있어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가 파괴되고 자구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문화재단의 역사가 20년을 넘어서고, 재단의 규모가 지속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 및 그에 따른 통계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¹⁷⁾ 지역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문화지표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지역문화 관련 핵심 법률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1994)」과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으며, 2014년 3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까지 지역문화 법령이 3개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게 된다.¹⁸⁾ 지역문화진흥의 기준이 되는 「지역문화진흥법」은 각 지역의 문화적 습속과 해당 지역 고유의 문화유전자를 재생하면서 문화 다양성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다. 동법(同法)에 따라 이를 주관할 지역문화진흥원¹⁹⁾이 설립되고,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과 연구와 실천이 시작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해 국가와 지자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에 따라서 1차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2차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수립되고, 윤석열 정부는 2024년에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문화융성의 8대 과제는 (1)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2)전통문화의 생활화 (3)생활 속 문화 확산 (4)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5)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6)문화 융·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7)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8)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 축제로 승화이다. 이 가운데에 ‘(4)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①지역문화진흥 제도 정비 ②지역 간 문화의 균형적 발전 도모 ③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 가지의 핵심추진전략이 세워진다. ‘①지역문화진흥 제도 정비’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여가사 제도 도입 등 문화전문인력 육성 및 처우 개선, ㉢지역문화재단 법적 위상 정립 및 지역문화 협의체 활성화 등 3대 사업으로 구성되고²⁰⁾ 이에 따라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2)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윤석열 정부의 과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²¹⁾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책 여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적·산업적 변화가 특히 중요한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확산에

17) 임학순, 오현주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18) 정상철,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19)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시작되었으나 후에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개칭하였다.

20) 김종덕, 「문화융성 성과평가 연구보고서」,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92-113쪽

21)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2024)」, 2020

따라 초연결 지능화 시대로 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인구 변화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소읍도시가 소멸 위기에 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진흥책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2차 기본계획의 화두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로 정해진다. 문화분권과 자치의 원리로 지역문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협치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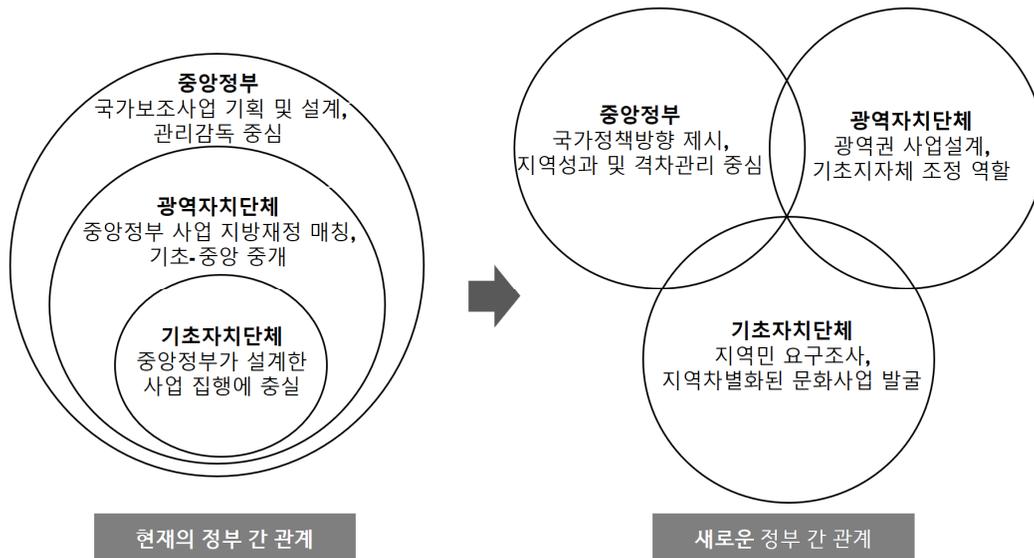
윤석열 정부의 박보균 장관이 발표한 새 정부 문화정책에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문화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자산이 풍부하지만, 지역 인구감소 극복 및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을 통해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즐겨 찾고 싶은 지역이 되도록 문화적 매력을 발굴하여 지역 균형 발전 및 공동체의 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①고유 문화자원으로 지역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명품 문화도시 조성(~23, 30개) 및 특화된 문화·체육·관광의 거점을 만들고, ② 자주 가고, 오래 머물 수 있는 지역관광을 위하여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과 ‘국민여행적금(가칭)’ 도입을 추진하며, ③ 관광두레 프로젝트를 위해 청년 ‘지역문화기획자’를 5년간 지속적으로 양성(‘22~’27)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문화부가 수립한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진흥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세 개의 전략으로 구분되는데²²⁾ 여기에도 지역주민을 생활사 기록전문가로 선발하는 계획이 담겼다. 어르신 프로그램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삼삼오오 청년 인문 실험’ ‘도서관 지혜학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이 있다. 이주민이나 탈북자 혹은 인구 소외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취약계층 대상 인문 멘토링’, 그리고 경험많은 실버세대가 참여하는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은 22년도에만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화정책은 이렇듯 부처 내에서도 연계성이 높은 정책들이 제각각 따로 존재한다. 문화부가 아닌 여타 중앙부처에서 집행되는 문화예산도 적지 않다. 일례로 통일부 산하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도 탈북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분산되어있는 정책을 어떻게 융합하는가에 따라 콜라지 효과를 통해 시너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중복 투자로 인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²³⁾

한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분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확대’와 ‘경계’의 입장이 상존한다.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문화 분야는 개인과 공동체, 지역의 자유와 자율성이 타 분야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자치’와 ‘분권’이 분명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문화진흥은 원칙적으로 지역 여건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고 지역 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분권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자치분권 못지않게 전국의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도시-농촌, 시-군-구,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역 간 문화의 격차가 존재하며 분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 현상이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든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수도권 평균 문화기반시설 개수가 전국 17개 지역별 평균 개수 대비 집중된 수준은 2007년 187%에서 2019년 208.6% 수준으로 극히 심화 되었다는 것이다. 인구에 대비한 문화 관련 예산과 기반시설은 군 지역이 우위를 보이는 대비해 예술인과 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는 여전히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다.²⁴⁾

22)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문학을 통한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치유 순례길 조성,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여행길 인문학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23) 부처별 문화예산의 수치, 수평적 비교를 통해 국가의 문화예산 총량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24) 정보람, 「위 연구보고서와 동일」, 문화관광연구원. 2020.

사실 문화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자체 성립 이후 꾸준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전훈은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²⁵⁾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4장에 규정을 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과 지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문화자치 및 문화분권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적인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의 다양화, 문화재정의 확대,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조정이 권유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리 감독 체계로 형성된 포괄모형에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하는 연계중첩형 모형으로 전환되고 있다.²⁶⁾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p.20

[그림 2] 지방분권에서 중앙-지자체의 정부 간 관계/역할 변화

연계중첩 모델로 진화하면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등 해당 지역의 기관들이 분절적 중복적 사업추진으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량적 평가에 집중된 복잡한 보조사업을 대·중·소 등 지역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나아가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 문화의 향유가 꼭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대형 문화시설에서만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다. 관람객이 적고 가동률이 낮은 문화시설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법에 따라 육성된 지역문화의 전문인력의 대도시로의 유출 대책도 필요하다. 사실상 도내 시군별로 가진 콘텐츠의 형태가 다르고 다양해서 시군별로 차별화된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문화분권에 대한 지속적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 새로운 시스템을 창안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유보할 것인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문화진흥”에는 법으로 명명되거나 자구(字句)로 규정할 수 없는 큰 함의(含意)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는²⁷⁾ 그동안 문화원을 중심으

25) 전훈,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6.

26) 문재인 정부는 2022년 1월, 별칭 지방이양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많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했다.

27) ‘지역문화’에 대하여 용어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동연은 “문화정책의 개념 중에서 용어의 맥

로 향토문화공동체로 발전해 왔고 문화재단과 문화시설기관이 협심하며 지역문화를 키워나갔지만,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중앙중심의 획일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예회관 등 전국 각지의 문화시설이 그 고을의 형세와 어울리는 조화로운 건축의 형태인가 자문자답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토를 반일생활권으로 만든 교통도 인구절벽인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방해한다. 진정한 한류는 고을고을의 풍습과 향토사와 생활사 및 민담, 인문, 철학 등 한국인의 다양한 사유의 체계를 복원하고 현대화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일이다. 각 지역의 문화가 숙성되는 것, 그것이 한류의 새로운 분기점이다. 지역의 문화원형과 지역문화의 체계적인 진흥 없이 세계 속의 한류문명을 말할 수는 없다.

Ⅲ. 지역문화진흥 및 한류문명 발화를 위한 두 가지 제언

1. 문화 뉴딜과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대중문화를 통해 한류가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지만 정작 한류의 핵심이 될 한반도의 역사와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법과 제도 및 생로병사에 관련된 풍습 등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는 스토리텔링 장르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들여다볼 뿐이다. 따라서 한류문명을 위한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전통적 인문, 철학, 역사, 문화, 예술, 언어(사투리) 등 이를 연구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지역의 전설·민담·토속신앙 구술채록 등 스토리텔링 분야, 사진·영상·출판잡지·미디어 등 기록학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 지역의 역사와 풍속을 채집할 언어학, 유전학, 민속학, 인류학 및 고전 한문학과 어문학 분야의 인재도 요구된다. 지역의 자료를 축적하고 집적하는 데이터 아카이빙, 미디어콘텐츠,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4차 산업혁명에 특출난 IT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도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적인 사업으로 매년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시민문화기획자 양성, 문화이모작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누적 배출 인력은 2019년 현재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수료생은 943명, 문화이모작 수료생은 893명이다.²⁸⁾ 대부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길러낸 인력이 지역에 머물지 않고 인근 대도시로의 유출이 심각하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인력양성과정을 위에서 언급한 분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지역 교육청 및 광역시도의 정책연구원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고, 지역대학에 정규과정 혹은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로 유사학과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학비와 교보재 등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석·박사 과정도 적극적으로 장려해 지역의 원형문화를 찾는 일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역문

락상 사용해서는 안 될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지역문화일 것"이라고 말한다. (문화연구(2013) 2권1호, 129-130쪽) '지역문화'는 지역이 가지는 특별하고 독특한 의미보다는 차별, 소외, 고립으로서의 문화적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며, 이는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던 영국에서 경제 성장의 핵심축을 담당했던 런던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문화를 "편협한", "고루한"이란 의미로 담아 지방문화(provincial culture)로 정의하려고 했던 것도 지역문화란 언어의 태생적 한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말에서 '지방(地方)'과 '지역(地域)'이 갖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 지방은 중심에 종속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서울과 지방이 있듯이 부산이 중심이 되면 인근 도시가 지방이 된다. 이렇게 프랙털 구조로 허브(hub)와 노드(nod)가 형성되는데 '지방'은 단 하나의 노드(nod)를 지칭하는 셈이다. 지역은 그 의미가 다르다. 서울도 부산도 지역이다. 따라서 '지방'은 중심이 아닌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는 상대적 기호이고 '지역'은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

28) 정상철,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16쪽.

화진흥원은 전국 각지에 산재하는 풀뿌리 문화조사 및 문화채집(採集)의 방법과 지표를 설정하고, 고향 출신인 해외 한인(韓人)의 삶으로까지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인문학 전공의 청년실업과도 연계된 정책이므로 ‘문화 뉴딜’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전문학 및 서지학 연구자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한문이나 이두(吏讀), 향찰(鄕札) 등 고어로 기록된 우리 전통의 인문, 역사, 과학 등의 서지(書誌) 번역 및 조사, 분석, 비평, 연구작업에도 나서야 한다. 사라져가는 방언 사투리 연구도 포함된다. 지방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할 수 있다. 향토사학자를 육성하고 의무 고용하여 향토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등 향토사 연구의 대중화를 도모해야 한다. 문화 뉴딜을 추진하면서 전국문화원연합회 혹은 지역문화진흥원 등은 연구 자료들을 집적하고 인력과 자료의 허브 역할을 할 ‘향토 기록 보존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센터에서는 한국인의 모든 원형 콘텐츠를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기관이 한민족의 전통과 현재와 미래 및 세계 속의 한류문명을 잇는 문화 교량의 기초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동북아문화재단 등 중앙기관과 각 지자체 정책연구원 및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칭 “위대한(韓)벨트(Great-Han-Belt)”를 엮기 위한 전초이다. 구한말 전후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韓人)의 삶과 그 문화유전자를 추적하여 지구촌 다문화 시대의 문화사적 자료들을 축적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글로벌 한민족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가 왔다. 우리의 국력과 경제적 수준이 그 정도는 가능한 시점에 온 것이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현재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는 한편 우리의 풍습도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 30년을 기준으로 한인 1세대는 끝나고 지금은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해외문화홍보 및 해외 동포교육의 확대를 위해 현재 해외 28개국에 설치된 ‘코리아센터(4개국 6개소)’ ‘해외문화원(28개국 33개소)’ 및 ‘세종학당(54개국 130개소)’을 확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서도 해외 저개발국가에 한국어 및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문화 및 미디어 관련학과 설립 및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2. 문화센서스를 통한 문화중산층 확대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 및 문화연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문화중산층’의 강화이다. 중산층(中産層)이라는 사회적 용어에 담긴 의미가 그러하듯이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부류를 중산층이라고 규정한다. 소득 기준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기준이 따로 있는데 조선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²⁹⁾³⁰⁾ 물론 나라별로 중산층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규정은 없다. 대개가 학자들이 편의에 따라서 혹은 설문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29) 조선일보 권혜련 ‘중간으로 산다는 것, 2017년 9월 19일 기사. (검색 22.8.1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826.html)

30)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640>)

 영국	 프랑스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어플레이를 할 것 ✓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할 것 ✓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할 것 ✓ 다들줄 아는 약기가 있어야할 것 ✓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할 것 ✓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주장에 떳떳할 것 ✓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 자료 : 조선일보 권혜련 '중간으로 산다는 것, 2017년 9월 19일 기사.

[그림 3] 해외 주요 기관의 중산층에 대한 정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은 - 직장인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 ①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②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③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 중형차 보유, ④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보유, ⑤ 해외여행 1년에 1회 이상 다니는 사람 등등 모든 조항이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 소득이 늘고도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에 놓여있다.

「통계법」 제18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문화 현황 파악 및 지역문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서 2년마다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하는데 2020년 조사기준지표는 <표5>³¹⁾와 같다. 기준년 조사대상은 전국 245개 자치단체(17개 광역, 228개 기초)이다. 이 지표를 보면 대개가 정량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표층 조사이다. 32개 지표로는 개인의 내적인 문화 취향과 문화참여의 계기와 지속성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조사를 한다. 학문적 이론이나 기존의 마케팅 자료를 분석해 변화를 모색하는 기초분석부터 시작하여 문화인류학의 통과의례 과정을 접목한 성장과정 추적분석, 제품 사용 행동 패턴 분석 등 다양하다. 지역문화에 대한 지표도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현황 조사 및 문화지표 개발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러한 지표는 산간 및 도서(島嶼), 해안, 농촌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생업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다. 중앙정부는 예산의 투입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같은 지표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해당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특수성에서 지표를 설계하고 이를 취합하여 계수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유사 생활환경을 가진 지역을 그룹으로 묶어서 문화실태 총조사를 한다면 위의 지표와의 차별성이 드러날 것이고 현장에 밀착된 지표로 지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AI와 연계하여 주민의 문화실태를 계속 추적하고 데이터를 모아 장기적인 맞춤형 문화진흥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2022

〈표 5〉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위한 최종지표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문화 정책	정책 사업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
		2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체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정책 환경	3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
		4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
		5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
	문화 예산	6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³²⁾
		7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
		8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
		9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
문화 자원	문화 유산	10	시·도 지정 문화재 수
		11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
	기반 시설	12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³³⁾
		13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14	공공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 인증 비율
		15	공공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비율
	자원 활용	16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
		17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
		18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
19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	
문화 활동	활동 조직	20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2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
	활동 인력	22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
		23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24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
		25	문화관광해설사 수
		26	법정사서직원 확보율
27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문화 향유	지역 주민	28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
		2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
	소외 계층	3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31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32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p.11.
원자료 도표에서 자료출처는 생략.

- 32) 문화관련 예산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2.7% 기초단체는 2.8%를 사용한다. 상위는 제주 4.89%, 광주 3.85%이다. 기초단체는 충남 부여가 9.85%, 경기 부천시 7.14%, 경남 함안군 7.08%로 평균에 비해 3~4배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3)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권은 강원도 양구군, 경북 울릉군, 강원 영월군, 전남 곡성군 강원 인제군, 전남 구례군, 강원 고성군, 전남 진도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양군, 전북 무주군, 충북 단양군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상위에 오르는 경향이 있다. 해당지역이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문화센서스’의 지표 항목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자료들이 모이면 국민의 문화적 취향 및 문화지수 파악, 문화 향유 패턴을 분석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의 지표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다. 핸드폰을 통한다면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 분석된 통계는 즉각적으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주민의 문화교육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이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해외에 알리고 각국의 문화지표 설계를 자문하며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펼칠 수 있다. 시원(始原)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지만, 누구인가는 창안자가 되어 남이 아직 가지 않은 길로 걸어야 하며, 이것이 한류문명을 발화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문화센서스’ 이외에도 문화중산층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전통적 습속이 남아 있는 생활문화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여가와 교양으로서의 ‘문화클럽’을 정책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³⁴⁾ 2019년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보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81.8%)은 높아도 관련 동호회 참여율(7.7%) 및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10.4%)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문화분권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수동적 관찰자와 능동적 참여자의 경험과 만족도는 분명히 다르다.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문화자치의 생태계가 구축된다. 더욱이 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에 나타난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문화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과 놀이가 하나가 되는 21세기이다. 국민 개개인이 문화소비자 겸 문화생산자가 되는 시대이다. 생활예술 및 생활체육은 물론이고 독서, 요리, 등산, 낚시, 바둑 등 여가 취미 분야와 역사, 철학, 과학 등 학술연구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는 문화클럽 프로젝트가 절실하다. 기업과 학교는 물론이고 고령화에 대비한 시니어 문화클럽과 주부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시민클럽도 조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시민들의 문화클럽을 돕기 위해 수준별 교재 및 전문 강사 등을 지원하는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한체육회, 시도의 문화재단과 문화원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전경련, 중소기업연합회 등 제 경제단체, 대학과 학회와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선진국을 넘어 문화 선진국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화는 삶의 부수적 요소가 아니다. 삶의 필수요소이며 따라서 국민 누구나 전통문화와 인문예술과 레저스포츠의 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클럽이 확대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획일화된 도시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문화와 습속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이 살아 있는 지역문화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문화 시설들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에 몰려 있다. 문화시설이라고 함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영화관, 과학관 등인데 기본 설비 투자비가 거대하고 그 규모가 크므로 대부분 인구가 많은 대도시 혹은 지역의 거점도시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수가 적은 읍·면 단위 이하의 농촌 및 산간도서 지역에서는 엄두를 낼 수 없으며, 문화시설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저조하여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가 군소도

34) 「2013 문화예술트랜드 분석 및 전망」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 문화 찾기가 유행으로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혜원·김혜인, 2013 문화예술트랜드 분석 및 전망, 제3장 제2절 참조)

시 소읍까지 전파될 수 있는 고도의 문화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른바 ‘문화뉴런’ 정책이다. 마치 뇌 속의 뉴런조직처럼 전국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물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각 고읍의 문화가 해당 지역 및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까지 촘촘하게 문화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의 전통적이면서도 독특한 고유문화가 인접 도시에 진출하여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읍·면 등 작은 규모의 마을에서도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특별히 고안된 문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풀뿌리 문화가 도시의 문화와 교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문화뉴런’ 정책의 목적이다. 문화사랑방³⁵⁾과 문화정거장³⁶⁾, 문화택배³⁷⁾ 등 세부정책도 만들 수 있다. 현재 문화부와 지역에 이와 유사한 문화정책이 더러 있다. 통합하여 발전 시킨다면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소외로 인한 고독사가 많아지는 시대에 문화뉴런은 개인은 물론 지역 간 문화지체 및 정체 현상을 없애고 계층과 세대 간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의 문화적 고립 및 이로 인한 문화갈등과 삶의 질 저하 요인을 없애고, 문화복지를 통한 문화중산층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Ⅲ.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추진체계

1. 정책추진 스토리텔링의 개괄적 이해

스토리텔링 문화정책은 필자가 줄곧 주장한 ‘스토리텔링 문화전략’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비단 지역문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스토리텔링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그것이 발전되고 구성원의 위기와 갈등을 거쳐 클라이맥스와 대단원으로 막을 내릴 때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플롯으로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뜻한다. 프랑스 혁명, 대통령 선거 등 사회드라마³⁸⁾를 포함해 온갖 연극 영화 TV 드라마는 비밀과 복선, 사건과 사건이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며 중국에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정서적 감동 즉 카타르시스를 얻게 된다. 스토리텔링의 역사는 구비전승 시대부터 컴퓨터게임의 시대까지 무수한 매체 변화를 통해 그 기법이 다양해졌다.³⁹⁾ 요즘은 정치가들도 경영자들도 스토리텔링 전략을 쓴다. 목적은 감동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책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밥을 짓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듯이 모든 정책도 단계별 순서가 있다. 따라서 정책추진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면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제철소가 없어

35) 문화사랑방은 주민들의 회로애락이 담겨 있는 마을의 역사적 공간을 택하여 첨단 시설 개보수 및 미디어콘텐츠를 지원하고,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와 풍속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회관, 사진관, 서점, 학원, 다방 등 정취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 공간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전국 3,495개(2021.7월 기준) 읍(234)·면(1,169)·동(2,092)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문화사랑방을 지정하면 된다. 사랑방에서는 시민문화클럽과 연계하여 문화중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뉴스레터를 포함한 미디어콘텐츠 제작소도 연계될 수 있겠다.

36) 문화정거장은 소규모 공연, 전시, 출판, 미디어 퍼포먼스 등을 펼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갖춘 문화플랫폼을 말한다. 전국의 기차역, 도시철도, 지하철역,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항만여객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문화정거장을 설치한다. 문화정거장은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발표회장이 되고, 프레스센터의 역할을 하며, 해당 권역의 축제, 숙박 및 유적명승지까지 알리는 문화관광 안내소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면 된다.

37) 문화택배는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경제적, 신체적 조건을 가진 문화소외계층 사람들에게 문화인력 및 작품 등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직접 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38)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Victor Tenner)는 최초의 사회드라마(social drama)를 출애굽기라고 말한다.

39) 이대영, 『스토리텔링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철강을 생산하지 못하면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에 신중해야 하듯이, 정책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일차 목적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은 대개가 정신적 영역을 다루고 있고 삶에는 당장 크게 영향이 없어서인지 인과법칙에 의한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문화정책은 늘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총론을 설계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량적 지수를 높이기 위한 각론에 몰두하여 귀한 정책이 모두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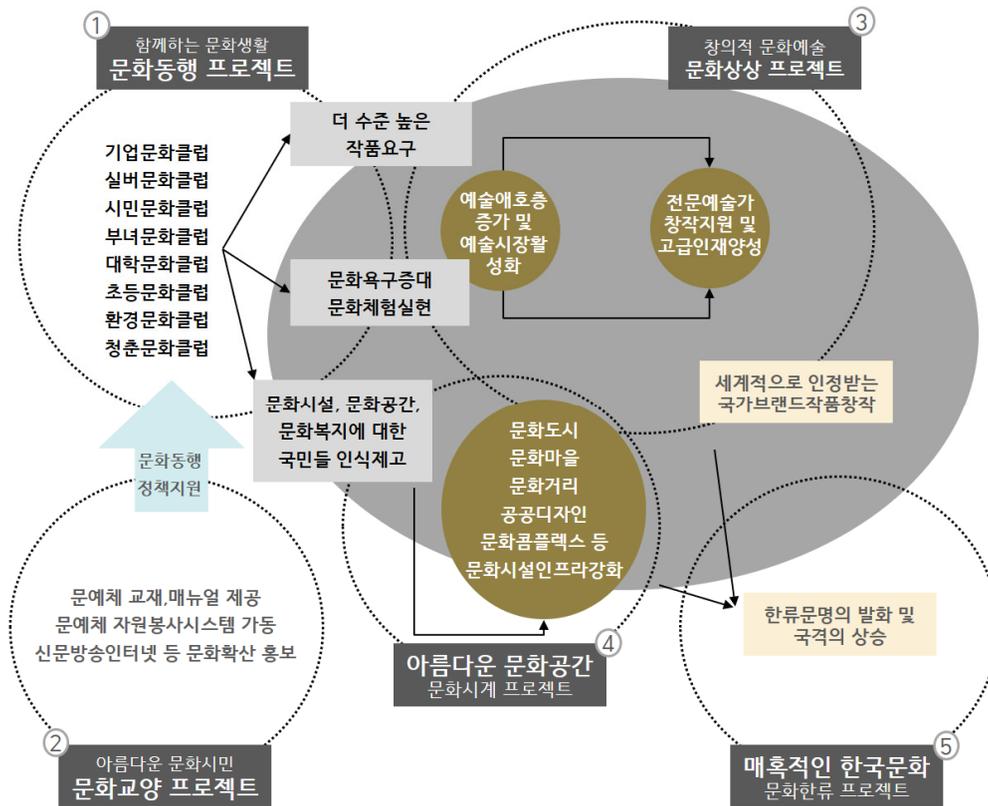
간략히 스토리텔링 전략을 풀어보자면 이렇다. 한류문명의 발아는 첫째 문화강국으로서의 국제적 명성과 활발한 콘텐츠의 교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교류하려면 뭔가 교류할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남에게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삶 즉 문화인데 역사와 철학과 예술이 그것이다. 한국인의 삶과 생각이 담겨있는 문화예술을 갖추어야 하고, 세계와 교류하며 문화국가로서 명성을 얻어나가야 한다.

한류의 국제적 명성은 백남준, 조수미 등 세계가 인정하는 천재 예술가와 드라마와 영화와 K팝 등 대중문화 상품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문예부흥은 예술가들의 상상과 표현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의 교양이다. 예술창작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다양한 문화 애호층의 확보 및 확대이다. '문화애호층'이 곧 '문화중산층'이다. 이들을 통해 예술시장의 구매력과 자생력이 강화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동행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민의 문화동행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주창하는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도 구호에 머물 것이다. 한류문명의 발아도 다 불가능한 일이다. 참여정부의 '문화산업 5대강국'이라는 슬로건이나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동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최우선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자명하다. 무엇이 정책의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후속으로 뒤따라야 하는지 말이다.

이른바 매혹적인 한류문명의 형성과 전파는 이렇게 복잡한 설계와 구도로 완성되고 전개된다. 스토리텔링 전략이라고 함은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책과 정책을 고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전후좌우 인과법칙에 의해 긴밀하게 입체적으로 연계시키는 과학적 축조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은 개별적으로는 합당하고 훌륭하다. 상호연계가 부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을 뿐이다. 스토리텔링 전략에 의해 정책을 시뮬레이션해보면 과연 어떤 정책이 먼저 출발해야 하는지, 어느 단계에서 또 다른 어떤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지, 또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토리텔링 전략은 문화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유전자와 습속을 담은 총론 개념의 문화설계도이자 사고실험을 통해 한류문명이라는 큰 지도를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레고 방식의 전략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스토리텔링 전략에 의한 정책추진의 예시

스토리텔링에 의한 문화정책을 간략히 구상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정책도 성장한다. 1단계가 성숙하지 않으면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는 상단(上段)의 정책은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이 없다. 1단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단계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집중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예산을 과격하게 조정하면 부처 및 유관 단체들의 갈등이 유발되므로 적어도 매년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만큼은 1단계에 집중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시작해야 한다. 적어도 한류가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 자료 : (2017) 『오래된 새로운 비전』 p.633 재구성

[그림 4]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추진체계

[그림 4]에서 보듯이 스토리텔링 추진전략으로서의 문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추진의 첫 단계는 ‘①문화동행’ 프로젝트이다. 21세기는 참여와 연대의 시대이다. 시민들이 함께하는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생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시민들의 자유 의지에 의한 능동적 문화동행은 적극적인 자아의 재발견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주동적 참여’⁴⁰⁾가 전제된다. 종래의 소극적 감상 및 향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정책으로 지원방식을 바꿀 경우,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인 시민은 감상자에서 참여자로 탈바꿈을 하게 된다. 국민 개개인의 문화에 대한 열정과 욕구는 문화동아리 활동과 생활공간에 영향을 미쳐 각 지자체는 고을마다 저마다의 개성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은 마을 공동체의 정신문화 및 역사문화의 재발견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문화교육, 예술교육 및 생활에 근거를 둔 ‘문화운동’⁴¹⁾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녀노소, 계층, 지역, 빈부를 가리지 않고 해당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사상과 정서를 공유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승화시켜 참다운 삶의 질을 확보하자는 데서 출발한다. 향토사학자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대학 및 문화원 문화재단 등 각급 문화단체 등이 협력하여 역사와 인물과 환경과

40) 주동적 참여라고 함은 해당 공동체의 주민들이 모여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무엇을 꿈꾸고, 어떤 놀이와 문화로 여가를 즐기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서 내 삶에도 문화와 예술과 철학이 오롯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원초적인 물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균열되고 이기적인 개인의 삶을 이웃의 삶, 즉 자기 공동체의 역사, 문화, 전통, 이웃, 향토애, 환경 등이 가미되어 있는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문화국가로의 발전과정이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지난한 통과의례의 과정과도 같다.

41) 본 정책의 핵심은 지역의 원로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주민이 공유해야 할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후배 세대까지 연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단위의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지역에 능통한 역사학자나 사회학자, 인류학자, 종교학자, 경제학자, 문화이론가, 생활연구가 및 예술가 등 연구자들을 모아, 해당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환경, 주민의 생활습관 및 욕구 등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활문화공동체 및 문화동행 프로젝트가 지속 발전하기 위한 예산 증대 등 다각적인 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풍속 연구가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 풀뿌리 문화운동으로서 각종 시민문화클럽이 활성화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지역, 학교, 직장에서 해당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해야 한다.

둘째 단계는 ‘②문화교양’ 프로젝트이다. 시민 개개인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양식과 체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창작에 나서는 단계이다. 21세기는 자신의 상상이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이다. 1인 미디어 시대이다. 시민들이 중심이 된 각급 문화클럽이 활성화 되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기를 즐기고 또 언제이든 훌륭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준비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시민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나서는 한편 문화 및 콘텐츠 창작활동에 필요한 교재와 강사, 교과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확보하여 문화 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발표 공간과 기기와 매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예술시장의 구매력과 자생력이 강화되고 문화 지출 확대가 이루어진다.

셋째 단계는 ‘③문화상상’ 프로젝트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공동체에 어울리는 문화마을 및 공간디자인 및 문화시설 등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문화기반시설과 공공 디자인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마을을 재생한다고 공공 미술이 들어설 때도 이러한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취미와 교양에 따른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중앙 및 지자체는 전문 프로예술인과 문화시민클럽을 연결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 콘텐츠 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콘텐츠 창작 역량이 강화되면 정부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미래 핵심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한다. 흔히 말하는 K킬러콘텐츠가 그것이다. 국민의 상상과 아이디어, 기업들의 집중 투자 및 연구개발, 정부의 규제혁파 및 유통체계의 진흥 등 3박자가 맞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초(超)국가 킬러콘텐츠가 개발된다. 지속가능한 한류 콘텐츠의 개발도 중요하다. 한류는 기존의 음악 드라마 영화 및 스포츠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한복, 한식, 한옥 등 의식주를 포함한 생로병사의 생활문화, 그리고 인문, 예술, 철학, 과학 등의 분야로 지속 확대되어 세계가 우리의 정신문화 및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기 시작할 때에 문명의 발신국으로서의 위상을 얻게 된다.

넷째 단계가 ‘④문화시계(視界)’ 프로젝트이다. 앞의 단계를 지나면서 문화유적, 문화도시, 문화거리, 문화마을, 공공디자인 등 관광산업이 부흥한다. 사실상 관광은 우리의 찬연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세계에 알리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다.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시 및 지역의 축제, 환경, 문화와 연관된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다. 나아가 의료와 관광이 만나고, 교육과 관광이 만나고, 예술과 관광이 만나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광레저비즈니스가 탄생한다. 세계시민은 저마다의 다른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찾을 것이나, 체계화된 관광시스템에 의해 입국 때부터 출국 때까지 아늑하고 편안하게, 문화로 더 잘 사는 한국을 경험하고 따뜻한 한국인을 잊지 못하게 된다.

다섯 단계가 끝으로 ‘⑤한류문명’ 프로젝트가 된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서 한반도를 포함하여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전자 즉 문화원형을 찾는 일이 시작된다.⁴²⁾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는 대륙과 해양, 역사적

42) 구한말부터 지난한 역사를 거치며 전 세계에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희로애락이 깃든 역사적 장소가 적지 않다. 해당 국가의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한류 및 문화교류에 나설 수 있다.

으로는 동양과 서양, 경제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 문화적으로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와 접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이 신(新)문명의 발신자이자 문화국가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세계시민과 함께 한인의 족적(足跡)이 담긴 역사적 유적을 찾아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일이다. 곧 ‘그레이트-한(韓)-벨트’ 형성이다. 정부는 문화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R&D 및 문화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21세기 문화정책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하여 문명발신국으로 위상을 공고히 한다. 이 단계에서는 물론 외교부 및 국내 글로벌기업이 함께하여야 한다.

IV. 결론

21세기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가 세계화⁴³⁾를 외친지도 사반세기가 넘었다. 세계화에 걸맞은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IMF의 고통의 시간도 보냈다. 그렇게 경제적 성취를 이루고 OECD에 가입하고 ODA지원을 하는 나라로 국가의 위상이 달라졌다. 한류의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세계는 우리를 알고 싶어 하고 한국의 문화가 무엇이며 어떻게 단기간에 성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는지 배우고 싶어 한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5천 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문화국가라는 점을 알릴 절호의 시기이다.

이를 위해 보고는 먼저 지역문화의 진흥정책에 대하여 논하였다.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과 윤석열 인수위의 110개 국정과제와 새 정부의 문화정책도 들여다보았다. 지역문화진흥의 정책 변화의 흐름도 살폈다. 그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은 새로운 문화지표 설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한인(韓人)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궤를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를 통해 한류의 국내외적 연구 지평도 넓힐 것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유전자에 맞는 원형적 사유와 문·사·철의 정신문화 및 최첨단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하여 ‘한류문명’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이다.

아울러 스토리텔링 전략에 입각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는데 ‘위대한(韓)벨트(Great-Han-Belt)’, ‘문화뉴딜과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센서스를 통한 문화중산층 확대’ 등이 그것이다. 나라별로 문화유전자가 다르다. 우리의 습속을 알아야 우리 맘과 우리 몸에 맞는 정책이 발현된다. ‘문화센서스’와 같은 문화지표조사 및 획기적인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법과 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운동이 개인과 지역과 국가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며, 세계 각국이 우리의 정책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수입해 가는 발신국의 위상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스토리텔링 전략에 의해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으며 단계별로 예산과 조직과 인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것은 문화행정가나 정책입안자나 입법자나 정책연구자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다. 드라마 영화 K팝 등 대중문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인의 문화유전자와 문화원형을 찾고자 지역의 각급 문화기관들의 연계 방안과 함께 전통과 첨단, 예술과 과학, 인문과 공학 등이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이 필요하다.

43) 김영삼 정부는 1995년 신년사에서 세계화 원년을 선포했다.

참 고 문 헌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계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2024)」, 2020.

_____ 「2022년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2022.

_____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현황통계분석]」 2022.

_____ 「새 정부 문화정책 (07.21)」,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 2021.

김종덕,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 성과평가 연구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김창규, 「문화국가 구현을 위한 문화분권의 과제」, 『공법연구』(제42집 제4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14.

박광무, 『한국문화정책론』, 김영사, 2010.

양혜원·김혜인, 「2013 문화예술트랜드 분석 및 전망」, 2014.

연수현, 「국제 비교를 통한 문화지표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이대영, 『스토리텔링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이동연, 「문화정책의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문화연구 2권 1호, 2013.

임학순, 오현주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전 훈,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 공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6.

정보람,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정상철,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최 광 외 『오래된 새로운 비전』, 기파랑, 2017.

웹사이트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640>)

- 조선일보 권혜련 '중간으로 산다는 것, 2017.9.19.일 기사.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30/2017083000826.html)

발 제 2

지방소멸 시대, 지방문화원 역할과 비전

장 훈(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I. 지방문화원의 여건

1. 거시환경

☑ 인구환경의 변화

- (저출산 고령화) '17년 합계 출산율 1.05명 → '20년 합계 출산율 0.84명,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 명에서 2067년 512만 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 수준으로 증가 예상
- (인구절벽)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증가하면서 2020년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기록
- (인구불균형) 2000년 수도권은 총인구의 46.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 49.2%로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비수도권의 인구를 초월하여 50.02%에 도달
- (외국인 주민 증가) 외국인 주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외국인 주민은 2007년에 723천 명이었으며, 이후에 연간 약 125천 명씩 증가하여 2014년에 1,569천 명, 2019년에 2,217천 명에 달함.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1.5%에서 2019년 4.3%로 상승

☑ 경제환경의 변화

- (저성장 고착화 및 경제 양극화) 3%이내의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지역 간 경제 격차 확대(OECD, 2018)
 - '00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각 48%, 52%였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15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이 높아졌으며, '19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각각 52.0%, 48%
 - 2020년 지역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산업연구원, 2021)¹⁾, 코로나로 인

1) 강두용·민성환(2021),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14호(2021-13), 산업연구원

한 지역별 충격의 정도나 회복속도에 차이가 크고 피해지역의 대부분이 비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경제 불균형 심화 우려

- (공급망의 지역화) 팬데믹의 영향,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재편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기술환경의 변화

-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삶의 질 상승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인간의 소외, 존엄성 상실 등의 우려도 존재
-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서비스 및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 콘텐츠는 디지털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디지털) 메타버스(Metaverse) 개념 확산, 빅데이터(big data) 활용 증대에 대응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SOC 디지털화 등 혁신생태계 활성화
 - 디지털 문화콘텐츠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개인 삶의 기록과 재구성이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음
 - 기록과 공유에 기반한 1인 미디어 시장 '18년 3조 8,700억 → ' 23년 8조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과기부, 2019)
 - 과거의 것을 새롭게 소비하는 뉴트로(New-tro)현상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음

☑ 기후환경의 변화

- (탄소중립) 기후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탄소중립은 우리사회나 세계의 거스를 수 없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저탄소, 그린)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리모델링 등 저탄소·친환경 전환 기반 마련
 - (ESG)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메카트렌드에 대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의 주체들의 ESG에 대한 관심 확대
- (환경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이상기후, 보건 재해(전염병 등)의 출현빈도가 높아짐에 새로운 가치(연대, 다양화, 환경, 사람)에 대한 관심 확대

☑ 정책환경의 변화

- (지방 자치분권) 지방 자치·분권 이행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의 재정여량도 확대되고 있음
 - 문화부분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문화분권이 문화정책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의 기초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강화, 지역특성 극대화로 전환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하여 추진 기대

〈표 1〉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주요 내용

3대 약속	국정과제	실행과제	주요내용
약속 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정과제①] 지방분권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관구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 관변화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를 자율적인 순수 민간활동으로 전환
	[국정과제②] 지방 재정력 강화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 균특회계 투자 규모 및 지역 자율사업의 비중 확대 • 점진적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
	[국정과제③] 지방 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 지·산·학 협력체계, 지역혁신기반 창업플랫폼 구축 등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
	[국정과제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확대 설치 및 운영	• 경제권역별로 5개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 확대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간의 협력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 지자체 간 협력 제도 시범사업 등 활성화 방안 강구	
분권혁신특구의 조성		• 분권혁신특구(가칭)를 설치·운영하여 지역경제발전 선도 기반 마련 • 특구 내 특례 인정, 지방분권 테스트베드로 육성	
약속 ②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 ⑧]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 주거·산업·공공 지원시설 등이 입주 가능한 혁신 공간 조성 • 인프라 지속 확충 • 문화·보육·주민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 혁신센터 등 건립
약속 ③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정과제 ⑬]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 지역대학 내 로컬전공 신설
		로컬브랜딩,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	• 동네 단위 로컬브랜드 구축 • 로컬브랜드와 제조업이 연계된 골목 산업화 추진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인프라 구축	• 도시재생, 문화도시, 청년창업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중앙-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	• 중장기·다가관·다사업 협약을 통한 유연한 협약제도 운영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 생태계 구축	• 창조커뮤니티의 단계적 확산
	[국정과제 ⑭]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	• 사회·문화 서비스 국가최저기준 마련 • 미디어 리터러시 및 지역방송 강화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	• 상향식 문화정책 사업 추진 • 현 공모 방식의 정책사업을 지자체 중심 상향식 정책사업으로 개편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 행정민원서비스+지역주민 모임활동+스포츠 활동+여가활동 등이 결합된 복합 공동체 공간 조성 • 각 지역 커뮤니티 활동지원의 통합적/상향식 접근	

* 출처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2022.4.27. 발체 및 재구성

- **(문화매력국가)**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 조성
 -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방향, 정책, 예산/재원, 실적 제출), 지방문화원 조례 권고 등 지방문화원의 지원과 관련된 역할 등을 명시

〈표 2〉 사회적 현안과 정책이슈

구분	환경변화	정책 이슈
인구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및 고령화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 다문화 가정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의 고령 인구에 대한 관심 필요 - 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 정주여건, 지역 이주민에 지역적응의 이슈 - 지역의 지속가능성 고민과 소멸위기의 지역의 기억 보존 필요
경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 고착화 및 경제 양극화 • 공급망의 지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의 역할 강화 필요 - 국내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역의 특화 사업 발굴 필요
기술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혁명 • 디지털 전환 • 1인 미디어(기록)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활용한 문화정보의 연계, 공유 체계 구축 필요 - 공동체성을 위한 면대면 접촉을 늘릴 수 있는 기회 마련 필요 - 개인과 공동체 기억의 기록사업화 필요 -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경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기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및 친환경 전환에 대한 적응 및 완화 전략 필요 - 친환경 소비, 착한 소비, 느린 소비의 콘텐츠 마련 필요
정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 문화로 매력국가, 문화로 균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분권으로 인한 문화예산의 축소 가능성에 대한 적극 대응 -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정책 추진 - 인간성과 공동체 회복 강화

2. 지역문화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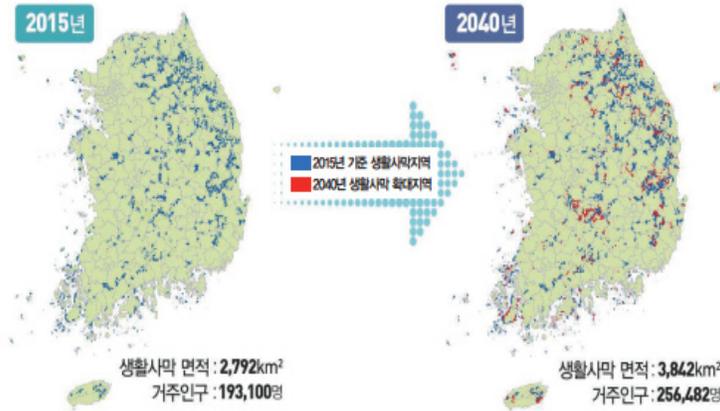
1) 지역의 현안

지역쇠퇴와 소멸

-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 지역의 쇠퇴와 소멸이 진행되고 있음
 - '18년 전국 228개 중 89개(39%)에서 '20년 105개(46%)가 소멸위기 가속화(고용정보원, 2018, 2020)

문화의 사막화와 지역공동체의 붕괴

- 지역쇠퇴와 맞물려 문화적 자산, 기억이 소실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정체성과 공동체의 붕괴도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생활권의 위기) 인구감소 및 지방쇠퇴는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 감소, 인프라의 노후화·쇠퇴화로 이어져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확대 우려 (2040년 약 25만 명이 '생활사막'(Life Deserts) 거주 전망)



* 자료 : 임은선(2018),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방향과 과제, 국토정책 Brief 670, 국토연구원

[그림 1] 생활사막화 전망(2040)

- 지역의 인구유출, 유입된 인구의 부적응 등으로 인해 지역의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상황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 공동체 지수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지역의 문화정책환경

지역문화재정

- 중앙정부 문화분야 지출 : 총 지출 대비 1.6% (2020년 기준)
 - 2020년 문화재정은 8조원으로 16개분야(69개 부문) 예산 과목 중 1.6%로 나타나고 있음.
 -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8년 1조 6,387억 원).
- 지자체 문화분야 지출 : 총 지출 대비 4.8% (2020년 기준)
 -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총지출 253조 대비 문화분야 지출은 12.1조원 수준으로 나타남
 - 2020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중 문화 및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8%로,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문화기반시설

- (양적 확대) 2020년 현재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는 총 3,087개로 2017년 2,657개에 비해 430개 증가하였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방문화원과 문화의 집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등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공공도서관 '17년 1011개 → '20년 1,172개(161개 증가), 등록박물관 '17년 853개 → '20년 900개(47개 증가), 생활문화센터 '19년 129개 → '20 147개(18개 증가)

- (불균형)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문화시설의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음
 - 인구 백만 명 당 문화시설이 최대 196.34개부터 최소 30.14개로 지역 간 차이가 존재
 - 한편, 공연문화시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의 시도별 접근성(거리기준)은 서울이 각 시설 접근성이 가장 높고, 광역시의 접근성이 광역도에 비해 높음(국토지리정보원, 2020)
 - 지역의 정책, 지리, 인구 여건으로 인한 서비스의 공급의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문화조직

- 과거에 비해 지역의 문화정책 수요의 확대, 문화정책 사업 세분화 등으로 지역 내 문화매개조직이 다양해지고, 일부 영역에서는 경쟁도 나타나고 있음
 -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등은 설립근거 및 사업 내역에서 상당수 중복도 발견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재정 이후 문화재단의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의 문화정책시장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음
 - 문화재단('21년 현재 17개 광역문화재단, 104개 기초문화재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단으로 문화정책 사업이 수렴된다는 현장의견도 존재

〈표 3〉 지역문화 현안과 정책이슈

구분	지역 여건	정책 이슈
지역문화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 가소화 • 문화의 사막화와 공동체의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인구감소 완화, 적응, 극복 전략 필요 - 지역의 변화(재생, 개발 전 후 등에 대한 기록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유지 강화 - 지역의 공동체 활력 증진 필요
지역문화 정책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의 지방이양 • 지역 간 문화격차 발생 • 다양한 문화관련 시설과 조직의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권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 필요 - 문화사업의 분업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지방문화원의 고유사업 발굴 및 전문화 필요 - 고유영역에 대한 지방문화원 사업 및 역량의 균형적 발전 필요

3. 지방문화원 성과와 한계

1) 지방문화원 강점 및 성과

☑ 전국단위 조직으로 성장

- 지방문화원의 기본 근거규정은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이 법에 따라 문체부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

- 2020년 기준, 지방문화원은 전국 230개가 있음(정회원 수 10만 6천 명)
 - 도시특성별로는 대도시 69개(30.0%), 중소도시 79개(34.3%), 농어촌 82개(35.7%)
 - 권역별로는 수도권 66개(28.7%), 강원권 18개(7.8%), 충청권 32개(13.9%), 영남권 71개(30.9%), 호남/제주권 43개(18.7%)

〈표 4〉 도시특성별, 행정구역별 분포현황

(단위 : %)

도시특성별 현황			행정구역별 현황				
대도시 구단위	시단위	군단위 대도시군 포함	경기(13.5) 서울(10.9) 인천(4.3)		충남(6.9) 충북(4.8) 대전(2.2) 세종(0.4)	경북(10) 경남(8.7) 부산(6.5) 대구(3.5) 울산(2.2)	전남(9.5) 전북(6.1) 광주(2.2) 제주(0.9)
30.0 (69개)	34.3 (79개)	35.7 (82개)	28.7 (66개)	7.8 (18개)	13.9 (32개)	30.9 (71개)	18.7 (43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 출처 : 한국문화원연합회(2020), 2020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지역 문화의 산실 역할 수행

- 그간 지방문화원은 핵심적으로 향토자료의 축적, 지역 문화유산 발굴에 기여, 지역 문화정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축적된 향토자료와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이 만들어 지고 있음

〈표 5〉 지방문화원의 그간 역할

주요 역할	내용
지역 향토자료의 축적	- 그간 지방문화원이 수집 및 축적한 자료는 1백 4십여만 건
지역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 잊혀진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을 발굴 복원 - 지역의 문화유산 발굴에 기여
지역문화정책의 전초기지	- 문화학교, 실버 프로젝트,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 문화자원봉사 등 다양한 문화정책의 전초기지 역할
지방 원천콘텐츠의 활용	- '17년부터 시작된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사업을 통해 최근 원천콘텐츠를 활용한 2차 저작물들이 생겨나고 있음

지역 공동체성의 유지 공간

- '16년 문화원당 평균 4.1개의 문화공동체가 '2021년 7.6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적 주체를 설립하거나 계획 중인 공동체도 39개(2.8% 수준)

2) 지방문화원의 약점 및 한계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 모호

-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역할이 공모를 통한 보조금전달, 자체 사업에 치우쳐 있어 연합회 기본 역할이 회원 문화원에 대한 지원 역할이 미미함
- 시·도문화원연합회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회 형태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시·도에 조례가 있는 경우도 10곳으로 이중적이고 모호한 조직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조직위상의 재설정 필요
- 한국문화원연합회-시·도문화원 연합회- 지방문화원의 역할분담 미비, 운영체계 미비 지속

☑ 제도 변화로 인한 재정자립 약화

- (재정지원 한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의 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에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활동’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보조금 지원 불가
- (지방비 의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는 지자체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의 약 70% 차지

☑ 지방문화원 고유 역할과 핵심역량 약화

- 문화정책 태동기에 모든 문화정책을 문화원이 수행하면서 핵심 고유기능영역 외의 다른 영역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문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른 영역의 경우 다른 조직과의 경쟁 발생
- 이러한 결과로 지방문화원만의 고유 사업인 지역 공동체 문화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하고 있지 못함
 - 지역문화 발굴 및 수집 활동을 핵심 사업을 하고 자료실 영구보존을 위한 아카이빙(22.1%)을 하는 문화원은 적고, 자료의 위탁 기증 등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는 곳도 소수 (21.7%)
- 더불어 기존의 전통적 자료의 수집을 넘어 근현대의 개인과 공동체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장 수집하여 미래 유산으로 남기는 역량 배양의 기회 부재

☑ 문화행정과 문화경영 역량 부족

- (지원 근거미흡) 「지방문화원진흥법」은 구체적·실천적 조항미비, 조직·시설 기반 미흡, 법·제도 미비로 인한 문화원 자생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지자체 중 81.4%(188개)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를 마련, 문화원 운영 필수기반인 인력지원근거를 명시한 조례는 74개(39.4%), 시설지원근거를 명시한 조례는 168개(89.3%)
- (인력부족) 지방문화원의 평균 인력은 3.4명, 문화원의 약 42%는 직원 2명 이하로 연간 평균 28.7개의 사업을 수행, 사업수행 대비 인력부족으로 지역민들의 문화수요 대응에 한계 존재

- (전문성미비) 지방문화원 직원 중 문화예술전공자는 사무국장의 경우 39.5%, 일반직원의 경우 28.3% 수준으로 전문성 재고 필요
- (수요창출 부족) 역사문화, 향토문화와 관련된 연구역량, 자료수집과 관련된 역량은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지만, 이를 외부로 보여주는 역량이 부족
 -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축적의 중요도(70.8%) 및 활용의 요구도(역사문화관련 정보 획득, 43.4%)가 높은 반면, 축적된 자원을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의 부족(향토자료 대출 기능 65.4%)
 - 사단법인의 특성상 법인체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관리의 부재로 인해 회원수의 감소('16년 대비 '18년 총 회원 318명 감소)

〈표 6〉 지방문화원 현황과 정책 이슈

구분	주요 현황	정책 이슈
한국문화원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전달사업 위주의 사업체계 • 지방문화원 네트워크 관리 역량의 부족 • 문화원 네트워크 브랜드 구축 미흡 • 시·도문화원연합회 애매한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전달이 공모형태로만 가능해 지방문화원에 직접적이고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 - 연합회 조직체계 혁신을 통해 지방문화원 플랫폼, 네트워크 관리 및 지원 기능 강화 필요 - 핵심사업방향 설정, 문화원 브랜드 구축 및 적극적인 대외 협력 필요 - 지방분권 및 지역특성에 맞는 시도연합회의 위상확보와 권한 위임 등 필요
지방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여건 및 핵심 역량의 지자체간 편차 존재 • 문화원 조직체계 미비와 인적자원 부족 • 지역 내 역할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의 재정 안정성 및 자립도 확대 필요 - 제도적 근거의 표준화 및 현실화 필요 - 문화원 핵심역량의 상향평준화 필요 - 지역 내 문화원의 고유역할 집중 및 강화 필요 - 지역 주민 개방적 문화원 구축과 회원 확대 필요 - 문화재단과 협력을 통해 상행모델 구축 필요

II. 진단 및 미래 방향

1. 전략 도출

지방문화원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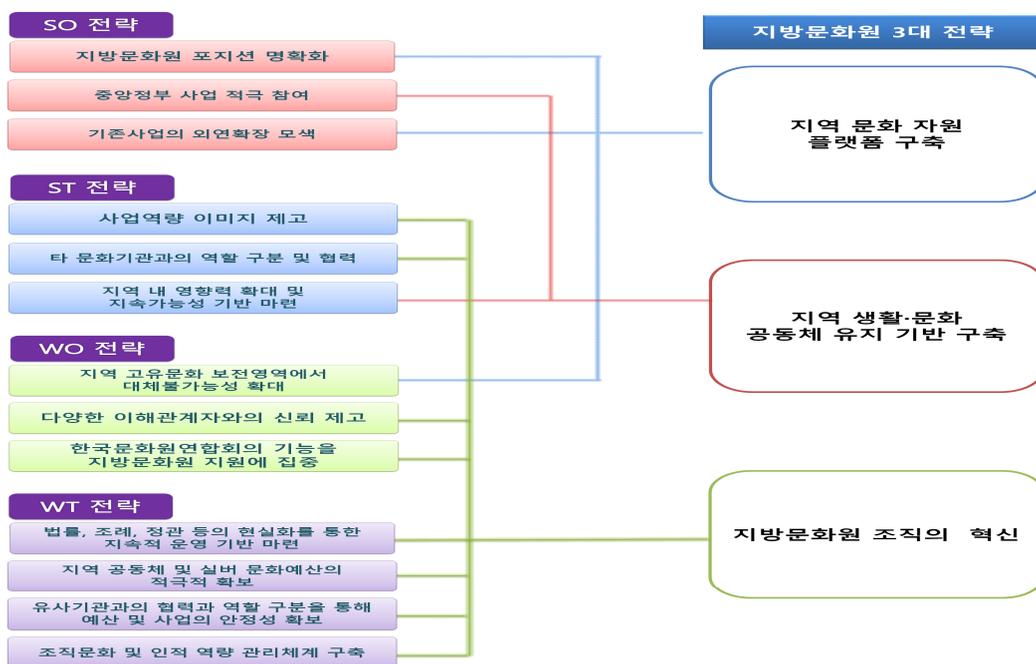
- 지방문화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문화원의 약점은 보강하고, 강점은 강화하여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전략 도출

〈표 7〉 지방문화원 SWOT 분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30개 네트워크 보유, 10만 6천 여 명 회원 보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법적 위상 보유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공동체 (1개원 당 평균 7.4개) • 평균 운영기간 39.5년, 오래 시간 지역민·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전문성 보유 • 지속적 지역문화자원 보존·발굴 활동에 따른 풍부한 원천콘텐츠 확보(소장자료 152만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에 대한 의존 심화 및 자율성 약화 • 시설 노후화, 오래된 이미지·이용객 편중(중장년·어르신 위주) • 문화원 운영체계, 문화원 네트워크 연계·활용 미비 • 문화원 인적역량 부족(인력 부족 등) (문화예술전공자 사무국장 : 39.5%, 직원 : 28.3%) • 보유 자료·정보에 대한 활용 미비
기회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의 쇠퇴·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문화자원 수집 필요성 증대 • 지역 고령층의 문화원 수요가 높음 • 공정한 문화향유의 확대 기초 • 이야기산업 등 지역 역사·문화를 활용한 콘텐츠개발수요증가 • 자치분권, 문화분권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관심 제고 기대 • 역사문화의 주체가 국가에서 개인과 공동체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국고보조 사업 확보 어려움 • 재정분권 가속화로 인한 지역문화재정의 축소 우려 및 문화원 재정 불안정성 우려 •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유관 기관·단체 증가로 지방문화원 기능의 중복 및 경쟁 발생 • 다양한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약화

☑ 지방문화원 3대 전략

- (지역 문화자원의 구심점 역할 강화) 지방문화원의 핵심 역할인 고유문화를 발견하고 축적, 유통하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 모색
- (지역 공동체에서의 역할 강화) 지방문화원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공동체와의 접촉면과 역할을 확대
- (조직의 역량 강화) 지방문화원 운영체계를 고도화 하여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미래 재도약의 발판 마련



〔그림 2〕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3대 전략 방향

2. 비전 도출

지방문화원 관련 법률 내용에 충실한 비전 설정

- 헌법 제 9조 문화국가실현의 원리: **민족문화 창달**
-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제 3조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지역문화 다양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 보전**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8조 지방문화원 사업: **지역문화의 계발·보전, 지역문화 발굴, 수집, 조사, 연구, 지역문화 창달 등**

지방문화원의 축적된 역량의 극대화를 통해 도달 가능한 비전 설정

- **(잊혀진 가치의 회복)** 지방문화원 그간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는 잊혀진 한국, 지역 문화의 가치를 회복,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임
- **(소중한 가치의 보호)** 지방문화원의 역할 중 하나는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소중한 지역 문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미래에 전하는 것임
- **(새로운 가치의 창출)** 지방문화원의 또 다른 역할은 축적된 지역의 문화자원, 이야기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해석, 활용하여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는 비전 설정

- **(삶의 균열)** 기술발전에 의해 가속화되는 인간의 소외, 면대면 접촉의 상실을 극복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기록 축적 및 재현
- **(공동체의 붕괴)** 면대면 접촉,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삶의 모델 제시
- **(지역의 쇠퇴)** 변화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는 지역의 모습들을 기록하여 보전하여 공동체 유산으로 미래 세대에 전승

도출된 비전의 내용

-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원칙, 지방문화원이 그간 해왔던 역할들을 종합하면, 지방문화원은 지역 정체성의 수호 및 전승 매개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역할에 충실하고 보다 심화 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향후 5년간 비전은 쇠락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의 재도약할 발판으로 지방문화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의 **고유성 창출과 공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3. 핵심 가치 도출

☑ 실행의 핵심가치 설정

- **(자율성)** 그간 문화행정구조에 의해 소극적, 의존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지방문화원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자립성, 독립성, 자율성 등의 가치를 가진 조직으로 변화
- **(다양성)** ‘다양한 문화 하나의 목소리(Multi-window, One voice)’ 가치를 통해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핵심조직으로 위상 정립
- **(혁신성)** 자율성과 다양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행화된 조직체계, 업무방식, 인적자원을 과감히 혁신하여 지방문화원 재도약의 발판 마련

Ⅲ. 미래 비전과 과제

1. 비전

- 비전 빌딩을 통해 지방문화원 비전은 지역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지역다움’의 창조와 공유가 되어야 하고 핵심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혁신성에 기반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SWOT분석에 도출된 지역 문화자원의 플랫폼 구축, 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유지 기반 구축, 지방문화원 조직 혁신으로 설정
- 정책과제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지방문화원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대응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

비전	‘지역다움’의 창조와 공유		
핵심가치	자율성	다양성	혁신성
추진전략	1. 지역 문화 자원 플랫폼 구축	① 지역 공동체 생활·문화의 수집·기록 강화 ② 지방문화원을 지역학의 거점으로 육성 ③ 지역 문화자원의 국내외 공유 강화	
	2. 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유지 기반 구축	① 지역 공동체 문화유산의 복원·활용 강화 ② 지역 공동체 기반 문화교육체계 구축 ③ 지역 공동체 지원 서비스 강화	
	3. 지방문화원 조직의 혁신	①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조직체계 혁신 ② 지방문화원 인력의 역량 강화 ③ 지방문화원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④ 지방문화원 운영기반 고도화	

[그림 3] 지방문화원 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IV. 정책과제

1. 정책과제 도출

거시환경 변화, 지역의 현안, 지역문화정책여건을 고려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설정

-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지방의 소멸(문화, 기억의 소멸), 지역균형 발전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방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설정 필요
 - (고유역할) 지역고유문화의 기록과 발견
 - (미래지향) 디지털 공유 강화, 지역 스토리산업으로 발전 모색

지방문화원 핵심역량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준비 필요

- 기존 지방문화원의 역할 중 기존질서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도리어 미래에는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살필 필요
-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발견)발명하여 적응을 준비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함
 - (공간) 지방문화원 서비스 공간 및 품질 고도화(마을박물관 등)
 - (자료) 아날로그 정보의 보존, 정보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들
 - (인력) 불확실성에 맞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할을 위한 인력의 역량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역할 강화

- 지역소멸을 극복, 완화, 적응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이 가진 핵심역량인 지역의 정체성 보존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의 고유문화, 정체성을 활용한 지역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 필요
 - (다양성) 다양성을 유지할 통해 지속가능성의 근간 마련
 - (기록, 축적) 당장에 쓰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기록 축적
 - (공동체) 공동체 유지 및 확대 역할 강화

2. 도출된 과제(안)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 위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기본계획 연구에서는 전략 3개, 정책과제 10개, 세부과제 26개를 제시함
 - 다양한 과제 중 생활사 아카이빙, 마을기록 등 고유사업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 또한 지방문화원 역할 공고화 및 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마을박물관 우선 추진 필요

- 연합회차원에서도 지방문화원 핵심역량 지원과 향상을 위한 중앙지역학연구센터(가칭) 및 지역생활사 자료 수장고 확보 시급

〈표 8〉 지방문화원 기본계획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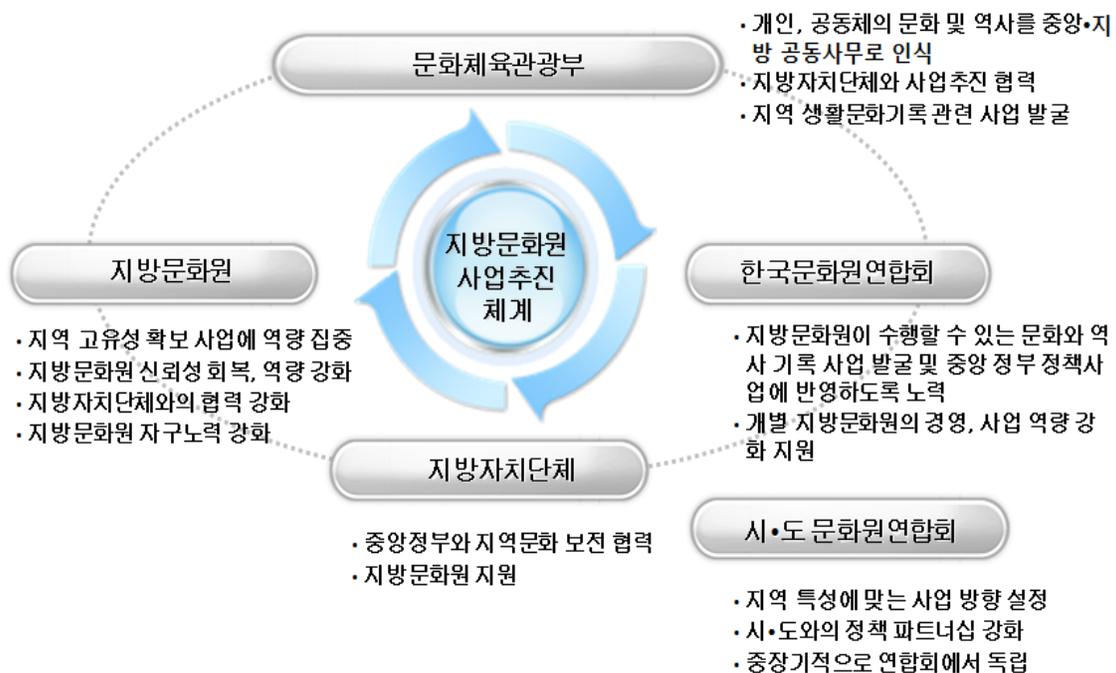
1. 지역 문화 자원 플랫폼 구축	① 지역 공동체 생활·문화의 수집·기록 강화	소멸 위기의 당대기록사업 추진 개인·공동체의 역사(생활사) 기록사업 추진
	② 지방문화원을 지역학의 거점으로 육성	지방문화원을 중심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 지방문화원의 마을 기억 저장 기능 강화(마을박물관 등)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의 활용 강화
	③ 지역 문화 자원의 국내외 공유 강화	지역 간 향토문화자원의 교류 강화 국제 지역문화 교류 강화
2. 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유지 기반 구축	④ 지역 공동체 문화유산의 복원·활용 강화	잊혀진 지역문화 복원 추진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 강화
	⑤ 지역 공동체 기반 문화교육체계 구축	문화학교와 생활문화센터 연계 강화 청소년 대상 지역문화 교육 강화
	⑥ 지역 공동체 지원 서비스 강화	이주민을 위한 지역 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지역 문화자원봉사 선순환체계 구축
3. 지방문화원 조직의 혁신	⑦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조직체계 혁신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플랫폼(수장고 등) 및 지원기능 강화 시·도문화원연합회의 독립성 강화 지방문화원 상향식 의사소통채널 구축
	⑧ 지방문화원 인적 역량 강화	지방문화원장 리더십 교육 확대 지방문화원 직원의 실무역량 강화 지역 생활사 전문인력 양성
	⑨ 지방문화원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지방문화원 내부직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지방문화원 사업 파트너와 협력 강화 지방문화원 수입모델 개발 및 확산 지방문화원 대외 이미지 제고
	⑩ 지방문화원 운영기반 고도화	지방문화원 법·제도 개선 지방문화원 운영의 표준 마련 지방문화원 시설 및 환경 개선

V. 추진체계 및 제도 개선 사항

1. 추진 체계 및 역할

☑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주체의 역할 설정

- (문체부) 개인·공동체의 문화 및 역사를 중앙·지방의 업무로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내 국가·지방 공동 사무 발굴 및 확산
-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지역문화 보전 사업 개발을 위해 협력하며 지방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례 등) 마련 및 성과 관리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발굴된 사업에 대해 지방문화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
- (시·도문화원연합회) 시·도와의 정책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장기적으로 독립된 연합회 역할 수행
- (지방문화원)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고유성 확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방문화원의 역량 강화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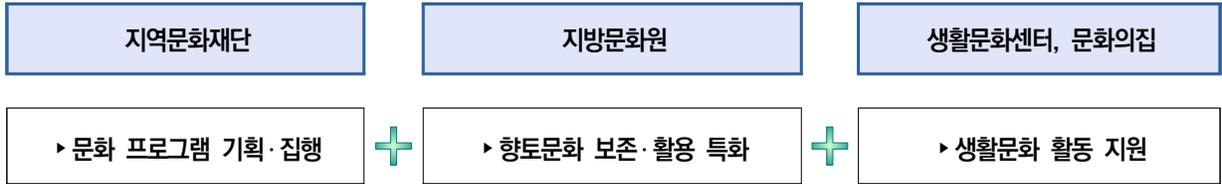
[그림 4] 지방문화원 활성화 추진체계 및 역할

2. 제도 개선 검토 사항

☑ 지역 문화기관 간 역할 중복 해소와 상생 방안

- 지방분권화 이후 설립된 지역문화재단과 지역 문화원 간 역할과 활동의 중복경쟁으로 지역 내 갈등 발생 및 문화원의 역할 축소

〈제2차 지방문화원진흥기본계획(2020~2024)/지역문화 기관별 역할 예시〉



- (검토사항)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과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에 근거, 유관기관 간의 관계 조정 및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혹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정부의 보조가 가능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보조금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여 문화원의 운영이 열악해져 불만 상존
- (검토사항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의 별표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삭제
- (검토사항2) 「지역문화진흥법」 인구감소지역(지방소멸지역)에 대한 문화적 시책(지역기록 등) 마련 사항 추가(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참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문화원 지원근거 명시

- 지방문화원은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15.1.1.폐지 후 예산확보가 어렵고,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조례가 있어도 행안부 상기 운영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예산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
- (검토사항)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를 근거로 지자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상기 운영기준에 명시

〈별표 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개정요구〉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기 존	개 정 요 구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생략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 (...)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생략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 (...) 생략

참고 1 : 지방문화원의 주요 성과사례

1. 지역 전통문화의 복원 및 활용 사례

☑ 강릉단오제

- 강릉단오제는 1967년의 행사 중에 제례, 관노가면극, 무당굿 등 세 분야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됨
- 1973년 강릉문화원이 단오제 진행을 담당하면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축제로 바뀌었으며 강릉문화원 내 강릉단오제 행사팀을 구성함
- 2005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릉단오제” 선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강릉문화원에서 강릉단오제위원회로 분리·독립되어 2007년 (사)강릉단오제위원회가 출범됨



* 출처 : 강릉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danojefestival.or.kr>

[그림 5] 강릉단오제

☑ 성신대제

- 마산문화원은 2008년 성신대제의 전통성을 복원하고 마산의 토속적인 민속의 원형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성신대제를 복원, 지역의 축제를 개최함
- 마산문화원은 2006년 마산성신대제보존회를 재 창립하고 학술연구팀과 공연예술팀을 구성하여 현재 까지 10차례의 학술발표회를 하였으며 7권의 자료집을 발간함
- 1950년대 참가자의 구술 자료와 전문가들의 고증을 참고하여 9차례의 종합공연을 함
- 2016년 성신대제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됨



* 출처 : 마산문화원 내부자료

[그림 6] 마산문화원의 성신대제

☑ 도봉서원 전통향제

- 도봉서원은 2009년 주변의 각석군과 더불어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도봉서원 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복원사업이 진행됨
- 도봉서원은 오늘날 서울 지역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으로 매년 봄, 가을에 정암 조광조와 우암 송시열의 학문적 사상과 덕행을 추모하는 <도봉서원 춘·추제향>을 봉행하고 있음
- 도봉문화원은 도봉서원 제향을 봉행하고 선열들의 선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봉서원 선비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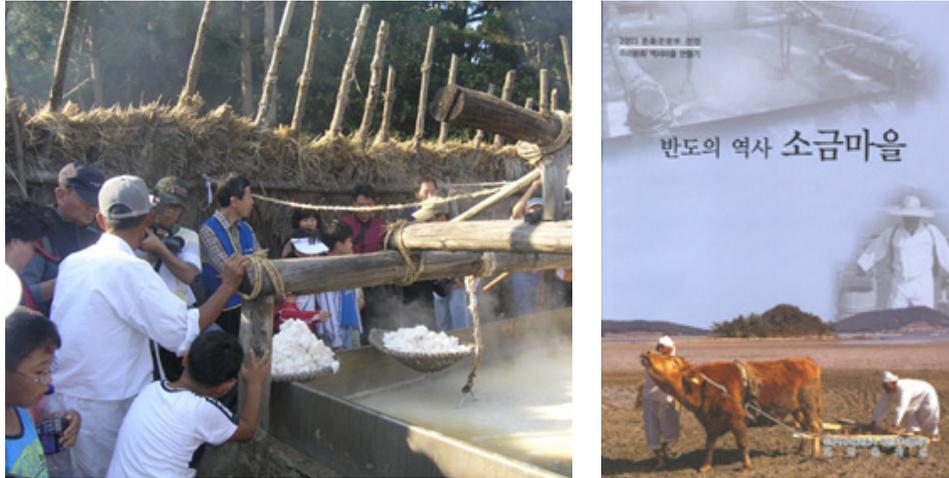


* 출처 : 도봉문화원 내부자료

[그림 7] 도봉문화원의 도봉서원 전통향제

☑ 전통소금 '자염'의 복원

- 태안문화원에서는 2001년 사업비 중 활동사업비 절반에 대한 목 전환하여 자염재현을 추진함
- 2001년 자염복원에 성공하여 재현행사(자연축제)를 개최함



* 출처 : 태안문화원 내부자료

[그림 8] 전통소금 '자염' 관련 자료

- 2003년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우리고장 역사문화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자염체험장을 조성함
- 자염축제는 2006년 충청남도 향토축제에 지정되었으며 2013년~2014년까지 태안소금 명품화 사업을 통한 축제를 개최
- 복원된 태안자염을 활용하여 태안문화원은 '자염재현' 축제개발, '태안자염' 지역특산품개발(상품개발), 반도의 역사 '소금마을' 조성, 교육도서, 아동도서, 잡지 등을 통한 태안자염 소개, 전국 박물관, 전시관에 자염도구 및 이미지 대여, 영화, 방송 등을 통한 영상홍보 등을 수행함

☑ 부안 죽막동 수성당제 재연

- 전북 부안에서는 칠산바다를 지켜주는 '개양할미'를 모시며,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했음
- 부안문화원에서는 '개양할미'를 모신 수성당에서 치러진 대표적인 공동체 제의문화인 '부안 격포 수성당 풍어제'를 지역문화 자료로 기록화한 영상콘텐츠를 제작함
- 수성당 풍어제는 강신무가 아닌 정통 세습무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던 제의이므로 수성당 풍어제를 기록물로 제작하여,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갔던 지역주민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탄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그림 9] 부안 죽막동 수성당제 재연

2. 전통문화의 재해석 및 축제 활용 사례

☑ 용연선상음악회

- 용연선상음악회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용연에서 「용연선상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 선인들이 남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기획 운영된 프로그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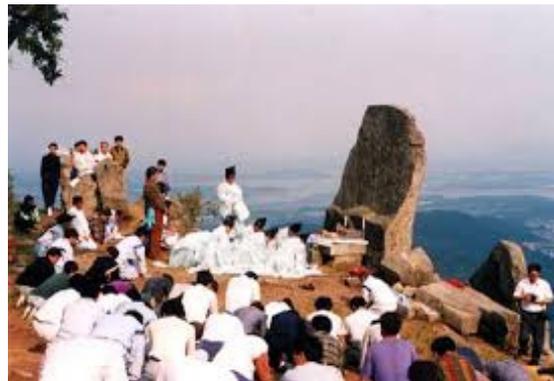
* 출처 : 제주문화원 내부자료

[그림 10] 제주문화원 용연선상음악회

- 용연선상음악회는 용연에서의 과거 풍류 문화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과거의 전통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발전적 문화요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민들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을 무대로 한 제주의 독특한 풍류문화를 제공하여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 용연선상음악회는 1999년 동굴소리연구회 주관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2005년 제6회부터 제주문화원 주관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 **설봉문화제**

- 설봉문화제는 1987년부터 2019년 33회째를 맞고 있으며 이천시에서 진행하는 축제 중 가장 오래된 축제임
- 설봉문화제는 특정한 소재를 주제로 만든 지역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세부행사를 유기적으로 엮은 종합적인 성격의 지역문화축제임
- 90년대 후반부터 설봉문화제 구성행사(도자기 축제 등)들이 분리·분산되면서 축제위상이 축소되어 2016년 시민토론회를 계기로 설봉문화제 내용을 전면 개편함
- 개편 사항으로는 전문예술인이 아닌 시민중심, 가족중심의 축제를 지향하고, 이천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내며, 생활문화의 개념을 적극 도입한 시민 참여형 지역축제로 육성하는 것임
- 제30회 설봉문화제(2016)를 기점으로 설봉문화제의 주요 변화내용을 요약하면 1.생활문화를 적극 도입한 시민참여프로그램 2.이천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 3.일반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아마추어예술가, 소규모 시민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기획임



* 출처 : 이천문화원 내부자료

[그림 11] 이천문화원 설봉문화제

3. 2차 저작물(콘텐츠) 개발로 활용 사례

☑ **영월 설화탐정(도서 + AR 앱)**

- (주)주렁주렁 스튜디오에서는 우연히 20년 전 절판된 영월의 향토 사료집(영월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엄홍운)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책속에 숨겨져 있던 1000가지가 넘는 영월의 지명 설화에서 78가지를 선별하여 도서 및 AR 앱 제작
 - 78종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 지역적 특색을 잘 나타내는 곳(지형적 특징, 기후, 방언, 생활풍습 등), 사라져가는 순우리말을 품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

- 제작된 도서와 앱 콘텐츠를 통해 전시가 진행되었고, 교육기관(영월소재 초등학교)에 배부하여 증강현실 역사, 설화교육도 진행



AR설화 엽서 | 엽서 위에도 앱 카메라를 비추면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인다



[그림 12] 설화탐정 AR 강원도 영월_모험의 시작

창작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제작



[그림 13] 창작 뮤지컬 어느 아나키스트의 아내

- 서울문화원연합회에서는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아들인 이규창 선생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이은숙 여사를 주인공으로 항일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겪은 삶의 애환을 그린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여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 우당 이회영 일가가 만주로 이주하여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들을 연극적 상상력으로 표현하여 항일독립운동 그 이면의 인간적인 애환을 그린 창작 뮤지컬을 제작, 영상으로 기록

애니메이션 잊혀진 왕국 맥 제작

- 강원문화원연합회에서는 강원도 곳곳에서 유물과 지명, 전설로 전해지고 있는 예·맥국의 흔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함



[그림 14] 애니메이션 잊혀진 왕국 맥

- 예·맥국의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강원도의 옛 지명, 예·맥국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전 세대의 공감대를 조성

4. 기타 사례

추사 김정희 자료 반환

- 과천문화원에서는 2003년부터 추사 김정희 선생 연구 선양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국제 학술회의를 준비하면서 후지츠 카치카시 박사의 아들 후지츠카 아키나오 선생을 찾아서 전화, 서신, 방문을 수십 차례 하면서 그분과의 친교를 쌓아 왔고 2006년 1월 그분에게서 부친으로 물려받은 추사 친필 작품을 포함하여 2,750점의 추사 자료와 관련 있는 서적 등 10,000여 점의 소장 자료를 모두 무상 기증받아옴 - 그 중 24점은 문화재로 지정받음
- 모든 일을 과천문화원이 추진했으며 기증받아온 자료뿐만 아니라 양이 방대하여 과천문화원에서 보관,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과천시에 건의하여 모든 자료를 과천시로 이관키로 하고 과천시에서

는 추사 연고지인 과천시 주암동에 과지 초당(추사가 거처하던 곳)을 복원하고 박물관을 건립하여 자료를 소장하고 추사의 연구와 현양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 과천시는 추사박물관을 세우고 과천문화원에서는 전국적인 추사 서예 대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미국악예술단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일생과 업적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함



* 출처 : 과천문화원 내부자료

[그림 15] 반환된 추사 김정희 관련 자료

☑ 지역문화 보전

●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건립

-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 '2004년 도시 저소득주민 및 농어민대상 생활친화적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에서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을 건립함
- 2004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정선아리랑학교에 다목적 문화공간이 조성되면서 개관하는 추억의 박물관은 기획전시 중심의 박물관으로 정선아리랑학교 진용선 소장이 보유한 4천여 점의 근현대사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추억의 박물관에는 민요자료 1,125점, 고문서·고서 1,332점, 교육자료 2,620점, 근현대사자료 2,632점, 광업자료 153점, 서화 106점 등 11,253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추억의 박물관은 매년 약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음



[그림 16]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토론세션

[토론 1-1] 문화부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방향과 과제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토론 1-2] 총체 융합 특화 가치 지향의
지역문화매력 정책 브랜딩을 위하여**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1-3] 지역문화의 가치창조체계를 위한 참여적,
융합적 지역문화정책체계 구축**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토론 2-1] 지역중심시대, 지역문화원의 역할과 비전
김성하(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토론 2-2] 지방소멸시대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과제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토론 2-3] 지방문화원의 존재가치 - 지난 60년, 그리고 앞으로 60년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토론 1-1

문화부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방향과 과제

노영순(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연구실장)

1.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

☑ 국정비전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이며,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 미래 + 지방시대 등 국정목표 설정

☑ 문화 분야 국정목표 및 과제

- 문화 분야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제시. 특히 국민들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중심의 문화균형발전을 강조
 -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취약계층 등의 문화누림 기회 확대
 -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전통문화의 독창적 가치 확산과 창조적 발전) 우리 고유의 문화보존 및 확산
 - (지역 중심 문화 균형 발전) 특색 있는 지역문화 발전,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모델 창출

☑ 자치·분권, 균형발전 부문 국정목표 및 과제

-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시
 - 지자체 주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권한의 이양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 마련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 초광역지역연합 구축 및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
 - 지역 주도 창의·혁신·창업 거점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집중 지원

2. 문화부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

- 국가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발전 또한 경제 및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인권, 민주주의 문화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을 달성해야 함. (새로운 성장과 발전방식 요구)
 - UNESCO(1995), Our Creative Diversity - “인간적, 문화적 맥락과 결별한 발전은 영혼이 없는 발전이다” (*Development divorced from its human or cultural context is development without a soul*)
- 문화는 이미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
 - 문화를 통한 도시 및 지역재생, 지역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등 소위 창조적 지역발전(creative regional development)은 지역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의 중요한 전략

☑ 지역의 개성 및 다양성 증진과 최소한의 기회보장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 우리 국민들은 물리적 기능의 배분과 분산에 비해 ‘지역의 개성/특성’을 발견하고,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 인식 (국토연구원-한국리서치, 2021)
 - 지역의 개성/특성 발전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높게 나타남.
 - 다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물리적 기능배분 및 공간분산을 수도권 거주자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

	전체	수도권 거주자	비수도권 거주자
(사례수)	(982)	(494)	(488)
지역의 개성/특성 발전	39.4	43.1	35.7
최소한의 기회 보장 측면 (의료/기초생활 서비스 등)	32.5	33.4	31.6
물리적 측면 (기능 배분/공간분산)	28.0	23.5	32.6
기타	0.1	0.0	0.2

(사례수=균형발전 정책 필요성 높음 인식자 982명)

* 자료 : 국토연구원-한국리서치(2021), ‘지역불평등 국민인식조사’ 결과

[그림 1] 균형발전 정책 초점

☑ 디지털, 저탄소·친환경 등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 대응한 균형발전 정책

- 4차산업·디지털 혁명은 변수가 아니라 이미 상수이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온라인·비대면 환경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더욱 가속화. 또한 탄소중립, 기후변화는 국가를 넘어 글로벌 의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하지만 기술환경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는 이의 수용능력에 따라 개인, 집단 혹은 지역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이러한 ‘디지털 격차’의 해소가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현안이 됨. 한편 문화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에 상대적으로 관련이 낮다 인식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지만 ‘기후변화는 문화적 도전’(세계도시문화포럼, 2017)임.
- 이에 문화분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디지털·탄소중립과 같은 글로벌 현안 관련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개별 도시 및 지역의 한계 극복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 문화시설 등의 자원이 고루 제공되고 못하거나 역으로 이용객이 없는 곳에 과잉공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 필요
- 기초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문화 관련 생활SOC 확보, 도로망 혹은 문화정체성(문화권) 및 자원의 유사성을 근간으로 한 지역 간 연계·패키지화(네트워크형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실효적 정책방안 마련 필요

[문화부문 균형발전 기본방향]

- ① 최소한의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보장을 위한 기준(최소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못 미치는 지역의 지원을 강구하고 (문화서비스 효율화 및 격차 완화),
- ② 지역의 문화적 개성을 살리고 다양성을 증진하여 전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며(지역문화의 가치 증진 및 브랜드화),
- ③ 디지털·그린뉴딜, 재생 및 리모델링과 같은 미래 국가비전과 부합되는 지역 문화사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문화기반 구축),
- ④ 개별 도시 및 지역을 벗어나 연계·패키지형 사업을 발굴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문화브랜드화 추진(다층적 공간정책 추진)

3. 정책과제(예시)

☑ (문화서비스 효율화 및 격차완화) 문화서비스 지원기준 마련, 문화취약지역 실효적 지원 방안 강구

- 인구감소와 기능쇠퇴가 현저하며, 재정자립도 등 행정기반이 열악한 지역은 국가가 특별히 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리하고 있음(예. 성축지역 등). 이들 지역은 문화체육관광 환경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균형적 문화발전을 위하여 집중적이고 지속 지원 필요
-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① 문화환경 진단, ② 사업 발굴 및 지원(시설·프로그램), ③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부처 내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여, 현재 처한 문화 분야 지역지원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삶 영위와 문화균형발전 모색

☑ 문화분야 지역불균등 해소를 위한 기준 설정 및 미래지향적 정책 추진

- (문화서비스 최소기준) 국민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어야 할 **문화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 인구규모,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최소 공급기준 마련
 - 시설 신규확충보다는 기존시설 및 유휴공간(예: 폐교 등) 활용,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서비스자원(예: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공급방안 마련
- (문화취약지역 기준) 정부 지원이 요구되는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활용**
 -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소외계층 분포현황, 문체부 외 타 부처 낙후지역 지정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
 - 문체부 등 정부 내 지자체 공모사업, 문화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에서 할당제·가점부여 등 우선지원 추진 및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검토
- (지역 내 불균등 대응) 시도 간 격차뿐만 아니라, **시도 내 문화자원·재정 등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추진(광역시도의 기능 강화)**
 - 시도 문화정책계획(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관내 기초지자체별 문화자원·인구·재정·기반시설 등의 차이를 감안토록 지침 마련
 - 시도 내 격차·분포에 대한 분석결과 제공을 통한 시도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활용)
- (미래선제적 정책) 현재의 낙후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중장기 국토·지역쇠퇴·인구 변동 등에 대한 전망을 고려한 정책 수립 추진**
 - 「생활사막지역」, 저출산·인구유출 등 지역전망·인구이동 추세 등 감안한 전략적 정책 수립

☑ 필요성 중심의 문화취약지역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계획공모형)¹⁾

- 지역이 자율적으로 관내 문화·체육관광환경을 진단하여 최적으로 **‘문화 활력 증진’ 계획을 수립·사업 발굴을 하면 부처-지방간 협약 체결 및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문체부)**
 - 생활 SOC 공급(도서관, 주민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 일자리 및 소득 창출(예: 사회적 경제조직, 관광두레) 등 문화·체육관광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자체 발굴(다분야 사업 지향)

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평가 및 수립 연구 내용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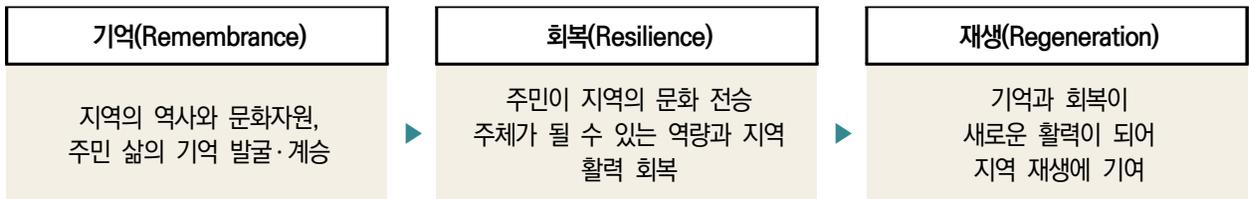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평가 및 수립 연구

**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균형위와 관계부처 합동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모델 적용

[그림 2] 낙후지역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패키지형 포괄보조사업 모델(예시)

☑ (지역문화 가치 증진 및 브랜드화) 지역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 강화

- 지방 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지역문화자원이 소실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정립 및 다양한 지역문화 진흥의 토대로서 전통적이며 차별성 있는 지역문화 보전 및 활용 정책이 요구됨.
 - 훼손과 소실 우려가 있는 유무형의 지역문화자원(문화유산) 보전 시급
 - 주민참여 기반 지역(특히 마을)문화의 기록과 보전, 활용을 통해 쇠퇴 위기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성 회복 요구



☑ 마을기반 지역 고유문화 발굴·보전·활용

- 소멸 위기에 처한 읍면동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 지역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수집·보존(문체부)
 - (사업)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공공도서관 등을 창구로 활용, 지역(마을)의 전통문화·생활문화·공동체문화에 관한 주기적 조사와 수집·관리
 - (인력) 마을 기반 구술인력(아키비스트) 및 관련 문화기획가 양성·지원*, 마을구술사를 활용한 현장박물관(Eco-Museum) 조성
 - * 50+ 신중년 일거리 창출 사업과 연계, 마을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마을구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 (서울특별시 50+ 마을기록가 양성사업 사례, 현재 종료)

- (아카이빙) 지역단위 기록문화를 수집·보관 및 활용한 디지털공동체아카이브
 - * 연계사업으로 마을의 주요 역사적 현장, 생활 거점 혹은 주민들의 인지지도(mental map)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문화지도' 제작
- (마을 만들기) 기록-문화관광 결합형 마을 만들기 (읍면동 단위)
- (유관기관 협력) 지역의 역사·향토문화 진흥 중추기관으로서 지방문화원 역할 정립, 지역학 진흥 위한 유관기관(지역 내 연구소, 대학 등) 간 협업 활성화

☑ (미래지향적 지역문화기반 구축) 디지털·그린뉴딜 등 미래 국가비전과 연계한 지역문화 기반 확보로 지역 간 격차 완화

- 온라인·비대면 환경 요구, 메타버스 등 디지털기술의 발전, 기후환경변화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지역 문화부문이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이 영역의 지역 간 불평등 완화 필요
 -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의 디지털화 작업은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
 - 문화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산업생태계 구축의 가능성을 높임.

☑ 문화기반시설의 리모델링(디지털·그린·유니버설디자인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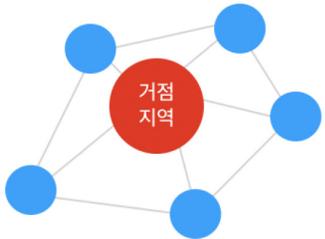
- 기존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상당수가 30년 이상 노후되어 안전·편의·에너지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새로운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어 리모델링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예산이 지역으로 이양된 상황으로 신축에 제약이 있으며, 신축 또한 자원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음.
 - 문화시설의 디지털화는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향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역 예술인의 기술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음.
 - 노후된 문화시설은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 과도한 탄소배출 및 운영비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선 필요
- 지역문화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무분별한 신축 억제 및 자원재생 유도, 디지털·탄소중립 등 미래지향적 시설로의 전환을 유도(균특 지역자율계정 내 '문화기반시설 리모델링' 지원 예산 확보, 균형위·기재부·문체부 등)
 - (디지털) 공연 및 전시활동의 온라인콘텐츠화를 위한 설비 구축
 - (그린)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교육 및 보육시설 리모델링의 정부 지원 既 추진, 국토부)
 - (유니버설디자인)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 가족 등)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리모델링 (문화적 포용성 증진)

☑ **디지털 기술 + 예술 결합형 新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구축**

- 순수 예술창작과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장르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문화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모색
- 2022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예술·기술 결합형 **아트컬처랩(문체부)**, **도심융합특구(균형위·국토부)** 등의 사업을 검증하여 **전국적 확산** 모색
 - 지역 예술대학과 기술 관련 대학 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로운 산업생태계의 토대를 만들고 미래 지역 성장산업화 모색

☑ **(다층적 공간정책) 지역 연계 협력형 지역문화 육성사업 추진2)**

- 문화는 지자체의 행정경계를 넘어서 **형성·교류됨**. 불가피하게 개별 지자체 단위로 문화사업의 기획,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문화/지리적 특성에 입각하여 지역 간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간 시설, 인력 등 문화자원의 공유와 공동사업 추진은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고, **지자체간 문화격차를 자치와 협력의 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
- 중앙정부 주도형이 아닌 **지역들이 사업을 스스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예산, 컨설팅 등)**하는 자치/분권/협력형 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 추진
 - 다양한 유형의 지역 간 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해줌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자원 및 기능의 공유 활성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사업유형(예시)) Hub & Spoke형, 권역형, 광역연계형 등 문화적 속성, 기능 및 규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협력사업 발굴 가능

<p>〈Hub & Spoke 형〉 생활권 중심의 거점-주변지역 연계</p>	<p>〈권역형〉 유사한 역사/지리적 특성을 가진 광역지자체 내 소지역간 문화협력</p>	<p>〈광역연계형〉 유사한 역사/지리적 특성을 가진 광역지자체 간 문화협력</p>
 <p>거점지역의 기능과 역량 공유를 통한 주변지역 문화발전 공동의 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p>	 <p>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유사한 문화특성을 가진 지역간 협력 (사례) 경기만 예코뮤지엄 조성</p>	 <p>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유사한 문화특성을 가진 광역지자체간 협력 (사례) DMZ 평화둘레길</p>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평가 및 수립 연구

[그림 3] 지역 연계협력형 지역문화 육성 사업 유형 예시

2)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평가 및 수립 연구 내용 인용

토론 1-2

'총체·융합·특화·가치' 지향의 지역문화매력 정책 브랜딩을 위하여

이무용(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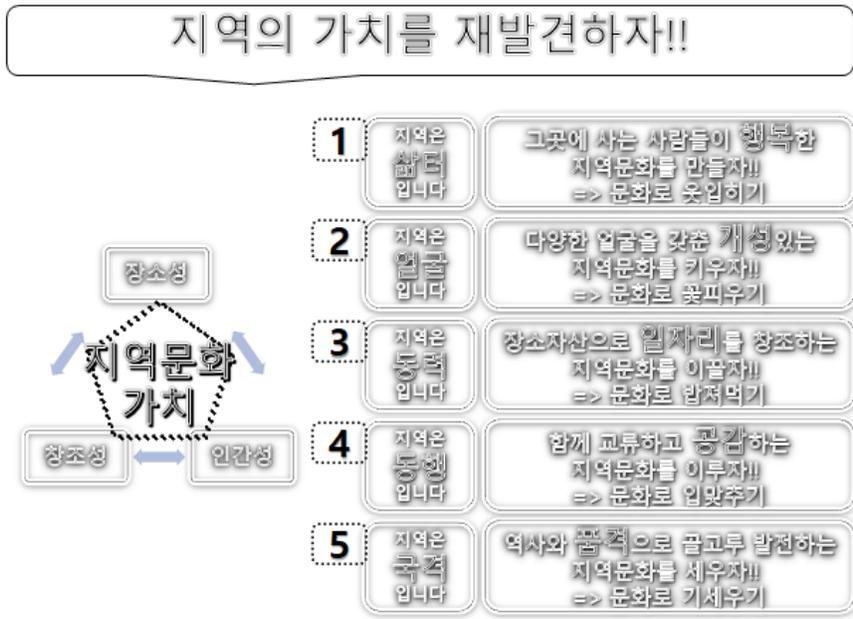
0. [화두(대전제)] 윤석열정부 지역문화정책 3대 키워드

'문화매력', '지역브랜드', '균형발전'
→ '총체성, 융합성, 특화성, 가치성' 중요

- 문화정책 : 문화매력, 자유·공정·번영·창의, K-콘텐츠, 지역균형, 치유
- 지역문화정책 : 지역브랜드, 명품문화도시, 청년지역문화기획자
- 지역균형발전 정책 : 지역주도, 혁신성장, 지역자생특화
- 3대 키워드 시사점 : '총체적, 융합적, 특화적, 가치지향적' 지역문화정책
 -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형평성·균등성·양' → '고유성·특화성·질'
 - 지역 고유성을 살린 특화 전략 : '콘텐츠·사업지향' → '브랜딩·가치지향'
 - 지역문화정책의 위상 : '부문·지방' → '총체·지역(장소)'

1. [기본관점] 지역의 문화적 가치(문화매력)를 재발견(재인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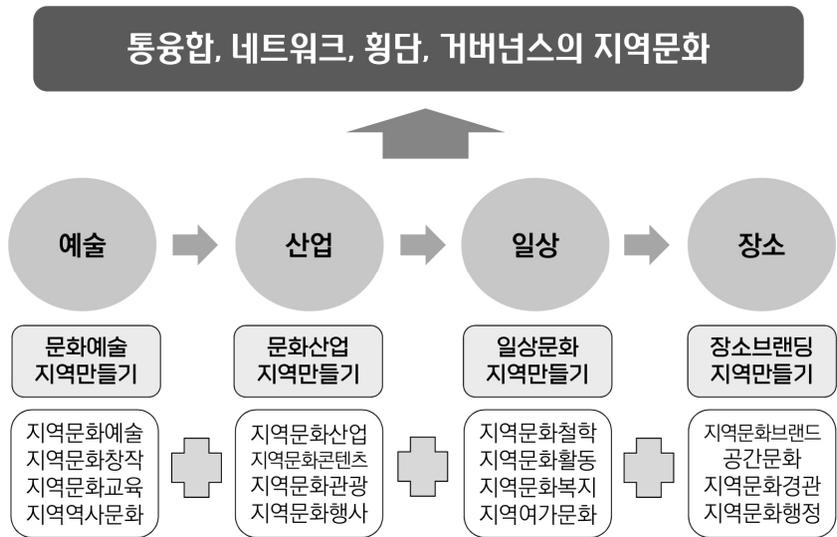
- '장소성, 창조성, 인간성'을 결합한 품격있고 매력있는 지역문화 창출
- 지역이 지닌 '삶터, 얼굴, 동력, 동행, 국격'의 5대 가치 제고
- '지방시대', '지방시대위원회' 명칭 제고 : 지역시대!!, 지역시대위원회!!



[그림 1] 지역의 5대 가치와 문화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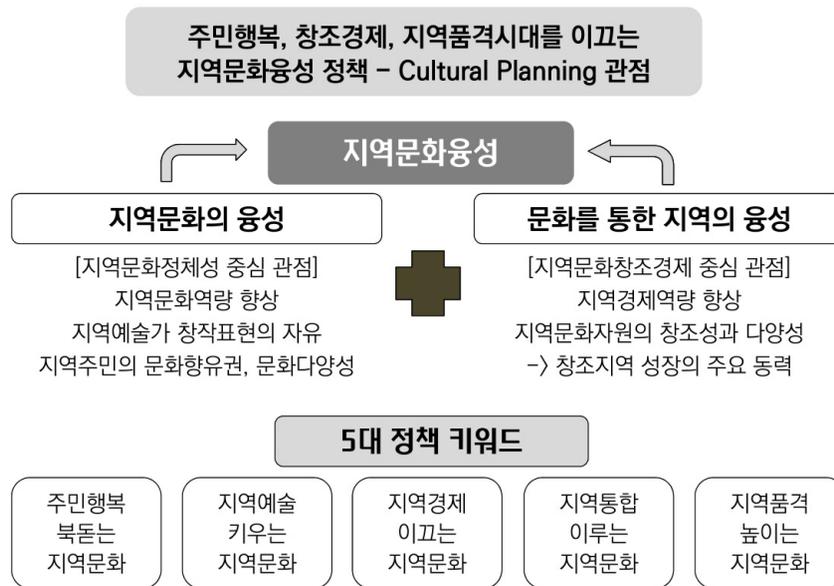
2. [핵심과제 1] 총체적 지역문화매력 정책 체계 수립

- 지역정책 전반을 문화적 시각에서 수립하는 통용합적 ‘문화계획 접근(cultural planning approach)’을 실현하는 총체적 지역문화정책 체계 필요
- ‘예술·산업·일상·장소’를 포괄하는 문화환경과 거버넌스 중심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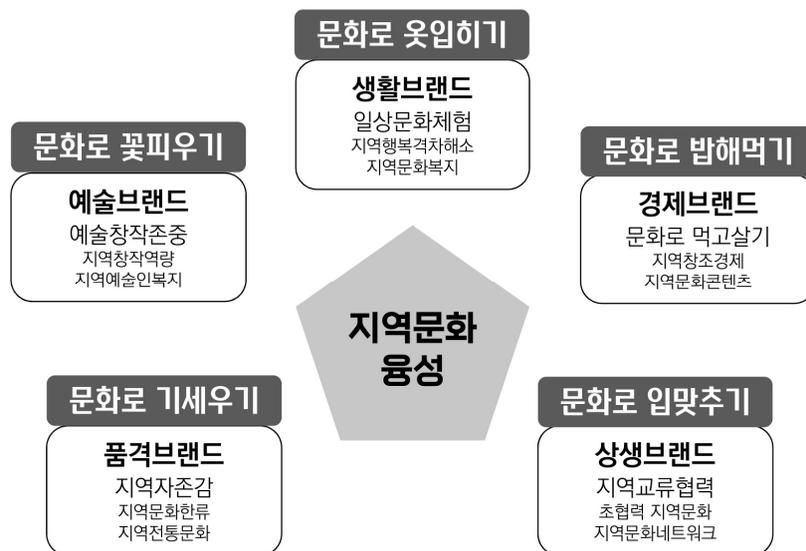


[그림 2] 문화환경의 흐름과 융합적 지역문화정책 영역

- ‘총체적 지역문화융성’의 관점에서 ‘지역문화매력’ 5대 정책 수립
 - 5대 정책 키워드 : ‘주민행복, 지역예술, 지역경제, 지역통합, 지역품격’
 - 5대 지역브랜드 창출 : ‘생활, 예술, 경제, 상생, 품격’ 브랜드



[그림 3] 총체적 지역문화융성 관점과 5대 정책 키워드



[그림 4] 지역문화융성 5대 지역브랜드

- 중앙정부·지자체의 총체적 지역문화정책 조직 모델 개발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 → 지방정부위원회)의 문화정책 기능 강화
 - 총리실 '문화부총리' 역할, 대통령실 '문화수석' 기능을 위한 직제 마련
 - 지역문화진흥원의 위상 제고: 국책 문화기구 네트워크의 하모니타워 역할, 지역발전위원회 산하 기관 위상
 - 지자체 문화정책 위상 강화와 조직 모델 개발: '문화부시장·부지사·부군수, 문화특별자치시' 직제 개발 및 문화도시 지정 조건화(2022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2곳 존재,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주제발표 관련 내용〉

- (문화기본법 기본이념)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문화정책이란 전 부처를 통괄하는 내재적 문화시스템을 뜻함
- 문화·교육·사회 부총리 직제가 되어야 온전한 문화정책을 펼칠 수 있음
- 부처별 분산되어 있는 정책을 어떻게 융합하는가에 따라 시너지가 될 수 있음
-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추진 체계 : 문화동행(생활브랜드) → 문화교양(예술브랜드) → 문화상상(경제브랜드) → 문화시계(상생브랜드) → 한류문명(품격브랜드)

3. [핵심과제 2] 플레이스 브래케팅(장소브랜딩+마케팅)의 관점에서 차별화·특화된 지역브랜드 만들기

- 플레이스 브래케팅(braketing=branding+marketing) 전략(= 장소가치 실현 전략)의 정책 수립 프로세스 체계 정립 : 파트너십에서 환류체계까지

〈Place Braketing 정책 수립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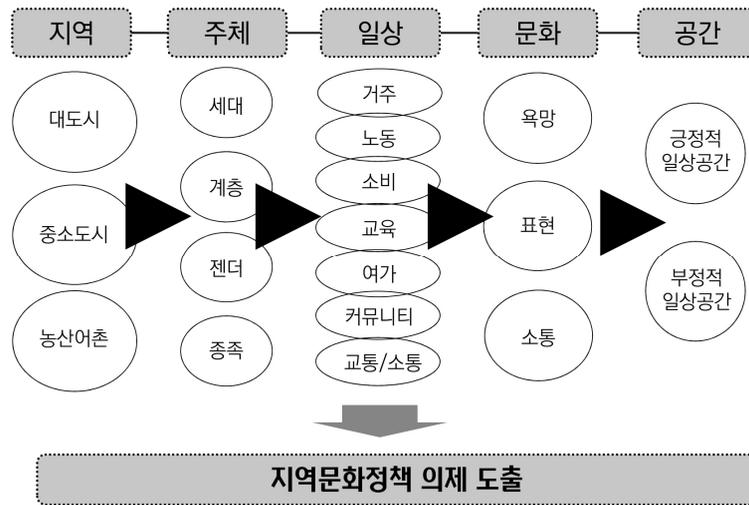
- ① 파트너십 계획과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정책 설계 →
- ② 차별화된 지역의 장소 가치와 정체성 기획 →
- ③ 지역문화 비전과 목표 수립 →
- ④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개발 →
- ⑤ 지역문화 평가 환류체계 수립

- 창조문화도시 만들기의 3요소('정체성·장소·사람')를 활용한 브랜딩 전략 수립 : 지역고유 문화가치에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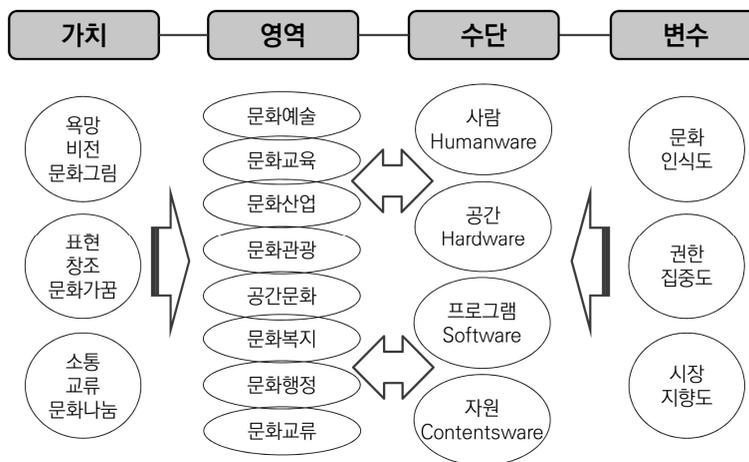
〈창조문화도시 브랜딩 핵심 요소〉

- ①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치 브랜딩
- ② 지역밀착형 생활문화 브랜드
- ③ 문화주체 역량 브랜드를 통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 ④ 도시브랜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역문화지도' 작성을 통한 문화센서스 조사 및 정책 수립
 - '지역 - 주체 - 일상 - 문화 - 공간' 매트릭스 조사를 통한 정책 의제 도출
 - 문화정책 '8대 영역, 4대 수단, 3대 변수'를 고려한 정책 과제 도출
 - 지역매력지표(or 지역행복지표) 등의 지역문화지표 체계 정립



[그림 5] 지역문화지도 매트릭스



[그림 6] 문화정책 8대 영역, 4대 수단, 3대 변수

- '지역맞춤형 문화전문인력' 양성 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 지역특성과 지역수요, 지역생애주기(PLC : Place Life Cycle)에 맞는 맞춤형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생애·경력' 맞춤형 문화인적자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문화인적자원센터-CHRC 설립)
 - 지역대학 문화전문인력 양성 기관 육성 지원(지역특성화 문화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지역문화사관학교 등)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인증제 추진
 - 지역에 정착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와 '컬처 메이커스(culture makers)', 지역문화매개자(cultural mediator, cultural networker) 들의 지속가능한 문화비즈니스 환경을 위한 총체적 정책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예술 + 일상' 문화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 주거, 노동, 소비, 여가, 교통, 교육 환경조성 참여 프로젝트
 - 예술가 '지역·고향 증장기 정착' 프로젝트 도입

〈주제발표 관련 내용〉

- 지역에 맞는 맞춤형 현황 조사 및 문화지표 개발 필요
- 문화센서스 지표 항목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야 함
- 국민의 문화적 취향과 문화지수 파악, 문화향유 패턴 분석 등 행복지표정책 추진
- 문화중산층 강화를 위한 문화클럽 활성화와 이를 통한 문화분권 실현
- 문화뉴딜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의 진흥은 해당 지역의 전통적 인문, 철학, 역사, 문화, 예술, 언어 등을 연구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서 시작됨
- 길러낸 인력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인력양성 분야를 다변화 해야함
- 지자체와 시도정책연구원의 협업 연구 확대, 지역대학 관련 학과 설치 및 석박사 과정 장려
- 인문학 전공 청년실업과 연계한 문화뉴딜 정책 추진
-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고도의 문화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뉴런 정책

4. [핵심과제 3] ‘지역문화한류(K-R Culture)’의 한류4.0 브랜드 만들기

-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한류4.0(지역문화한류, K-R Culture)’ 프로젝트
 - ‘한류1.0(K-Drama) → 한류2.0(K-Pop) → 한류3.0(K-Culture)’에 이은 ‘한류4.0(K-Regional culture)’ 브랜드 개발
 - 지역의 전통문화와 문화자산을 매력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창조적 재생
 - 국토브랜딩, 지역문화브랜딩 차원에서 총체적 글로컬(global) 전략 수립
- 한국 최초 국책 문화도시 프로젝트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브랜딩
 - 세계적 문화도시 모델로서 도시 리브랜딩(city rebranding) 전략 추진
 - 심층 평가를 통한 제2의 국책 문화중심도시 사업 추진(global brand city, korea brand city로 사업 성격 재규정)
- 세계 최초 통합적 ‘문화치유도시’ 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 4차산업혁명, 팬데믹, 지구환경위기 등으로 인한 삶의 방식과 문화의 역할에 대한 성찰 요구 : 자연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과 생명가치의 중요성 증대,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과 치유의 문화 만들기 과제
 - ‘예술치유, 자연치유, 음식치유, 공간치유’ 등 문화치유 4대 영역이 총체적으로 융합된 문화치유도시 지역특화 모델 개발

문화치유 4대 영역



[그림 7] 문화치유의 4대 영역과 특화모델

〈주제발표 관련 내용〉

- 한류문명의 발화를 위해 지역문화가 중요함. 각 지역의 문화가 숙성되는 것, 그것이 한류의 새로운 분기점임. 지역의 문화원형과 지역문화의 체계적인 진흥 없이 세계 속의 한류문명을 말할 수는 없음
- 위대한(韓) 벨트(Great Han Belt)를 통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추진

참 고 문 헌

- 이무용, 2022, 《창조적 도시문화경영과 장소 만들기 : 10개의 창조적 시선과 창조문화도시 광주 만들기》, 전남
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원중 외, 2015, 《지역발전 정책론 : 이론과 실제》, 율곡출판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2013, 《문화융성 시대 국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 1-3

지역문화의 가치창조체계를 위한 참여적, 융합적 지역문화정책체계 구축

임학순(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hsyim@catholic.ac.kr)

이대영 원장님께서 지역문화를 글로벌 문화, 국가 문화, 개인 문화 등 다양한 층위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문화뉴딜, 문화센서스,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모델을 생생하게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에 소중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대영 원장님은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에 대한 문화정책 흐름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의 의미를 분석, 제안함으로써, 지역문화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이대영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문화뉴딜 정책모델, 문화센서스 정책모델,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모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 “문화뉴딜”: 기록·창조적 활용의 연결과 협업체계 구축해야

이대영 원장님은 문화뉴딜 정책을 제안하시면서, 기록과 아카이빙, 기록 인력 양성, “향토기록보존센터” 설립 등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의 범주를 향토 기록 뿐 아니라 글로벌 한민족 문화에 관한 기록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위대한 한(韓) 벨트(Great Han Belt) 차원에서 지역문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과 글로벌을 총체적으로 연결하여 바라보는 글로벌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뉴딜 전략에는 한류를 콘텐츠 산업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K-culture 차원과 지역문화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뉴딜 전략은 지역문화의 가치창조체계 맥락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는 인문학적 가치, 문화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과 의미 해석,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의 가치창조 네트워크 체계(value creation network model)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의 가치 창조 네트워크는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연결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가치를 분석, 창조, 유통, 소비, 가치의 확장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은 지역문화의 가치 창조체계의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가치창조 네트워크 접근은 지역문화 상품과 콘텐츠 개발, 소비자 가치와의 연결, 지역문화의 경험 환경 조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기록과 아카이빙, 의미 해석, 콘텐츠 기획, 소비자, 시장, 문화비즈니스모델, 통합마케팅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다음 2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컬 문화크리에이터 양성 및 활동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컬 문화크리에이터란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문화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창조 인력을 의미합니다. 문화분야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문화크리에이터들의 문화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문화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데이터 공유, 맞춤형 전문 멘토링, 교육연수, 협업 환경 조성,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지역문화 콘텐츠의 IP(지식재산) 전략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문화뉴딜과 가치창조네트워크 맥락에서 지방문화원을 문화뉴딜 전략의 중요한 거점으로 그 역할과 사업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에 대한 기록 자료와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향토문화 연구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문화원은 향토문화에 대한 기록, 디지털 아카이빙, 활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향토 문화자원 기반의 콘텐츠사업 개발, 다양한 상상과 실험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문화관광 랩(Labs), 연구소 기능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 “문화센서스” : cultural mapping 기반의 수요자 중심 정책기획 체계 구축

이대영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센서스” 체계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실성 높은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과 참여적 문화정책 모델(participatory cultural policy)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대영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문화지표와 통계는 주로 공급자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역주민에 관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지표와 통계체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여가 활동 등에 관한 통계는 주로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정되었으며, 다양한 지역별 통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최근에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지표조사가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초 시, 군, 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조차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역문화정책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지역주민에 대한 데이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센서스” 전략과 연관하여 다음 2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문화 데이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지역문화의 활용 및 가치 확장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소비, 문화상품, 소비자,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가치 제안과 추천서비스 기능 또한 데이터 체계가 구축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체계는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디지털 데이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문화정책 현장의 문화행정 인력들의 문화지도 작성 (cultural mapping)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지도는 지역사회의 문화정책 수요와 이슈를 담아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한 준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지도는 지역 데이터 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지도에는 유형의 문화자원 뿐 아니라 무형의 문화자원이 포함되며, 지역주민의 특성과 문화수요, 지역사회 이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문화지도는 지역 문화정책 이슈에 대한 지역사회의 토론과 합의 과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문화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Ⅲ.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추진체계” : 참여, 연결, 혁신, 융합, 가치 확장 환경 조성

이대영 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스토리텔링 문화정책 추진체계 5단계 모델”은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문화정책들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holistic)이고 융합적 (collaborative convergence)인 문화정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문화정책모델”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사업들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계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텔링 문화정책모델”은 지역문화의 가치창조체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지역문화정책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문화정책 현장에서는 개별 사업 공모 중심의 지원체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 계획의 취약성, 정책 사업들간의 연결과 협력체계 미흡, 광역문화정책과 기초문화정책의 소통과 연결 미흡 등의 이슈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역문화 정책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중앙에서 내려오는 개별 문화정책 사업들의 분파적 비효율의 문제를 경험해오고 있다.

앞으로 새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문화와 지역사회, 지역경제, 지역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정책 영역과 사업들의 경계를 열어놓고, 참여, 연결, 혁신, 융합 기반의 지역문화정책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정책의 융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화정책 융합이란 문화정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문화와 예술의 가치창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융합 수요는 문화예술 현장의 융합 트렌드와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요구에 바탕을 두고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현장의 경우, 예술과 예술의 경계 완화, 예술과 산업의 융합, 예술과 기술과 미디어의 융합, 수요자의 주체적 참여문화, 예술과 사회문제의 연계 강화, 예술과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등 예술융합 수요가 커지고 있다. 문화정책의 경우, 정책융합 논의는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 개별 정책사업들의 팽창주의,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화정책 융합체계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참여적 문화정책,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정책, 정책 현장과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문화정책,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문화정책, 정책 소통과 조정이 활발한 열린 문화정책 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정책 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측면을 중요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¹⁾

1) 임학순(2022), “문화예술의 가치 확장과 문화정책 융합”, 『인천문화통신 3.0』, 2022년 6월호

첫째, 예술가의 역할 모델을 기존의 예술창작자 관점에서 벗어나 연구자, 협력자, 촉진자 관점으로 확대하여 예술가 정책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정책은 예술가들이 정책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술가들은 지역문화의 주체로서, 그리고 전문가로 문화정책을 성찰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미래 문화정책 계획을 구상하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합형 문화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 인력들과의 지식 공유, 커뮤니티 활동, 공동연구 개발 등 소통과 혁신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전문가와 디지털 기술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와 의학 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지식 네트워크 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정책 사업들의 연결, 협력,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융합형 정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 문제 중심의 정책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소통, 공유,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참여적 문화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문화원 또한 지방문화원의 의미와 가치를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지역문화생태계 맥락에서 분석하고, 그 위상과 역할 변화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학, 기록 및 아카이빙, 생활문화공동체의 거점, 지역문화학습의 거점 등의 역할을 심화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으며, 문화콘텐츠산업, 문화관광, 생태환경, 글로벌 한류 환경 등과의 연계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 2-1

지역중심시대, 지역문화원의 역할과 비전

김성하(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지난 2014년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국가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정부 문화정책방향이 전환 혹은 다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정부 지역문화정책 진단과 지방문화원 비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와 “새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주체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지방소멸시대, 지방문화원 역할과 비전” 발제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볼 수 있다.

먼저, 지역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지역다움’의 창조와 공유”라는 비전과 함께 제시된 3대 핵심가치(자율성, 다양성, 혁신성)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다양성, 자율성, 창조성)¹⁾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3개 전략(지역문화자원 플랫폼 구축, 지역 생활·문화 공동체 유지 기반 구축, 지방문화원 조직의 혁신)과 정책과제 10개, 세부과제 26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는 현재 지역의 상황과 문화원의 현황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제시되었다 볼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제시된 과제를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계획을 수립하여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으며, 충실히 실현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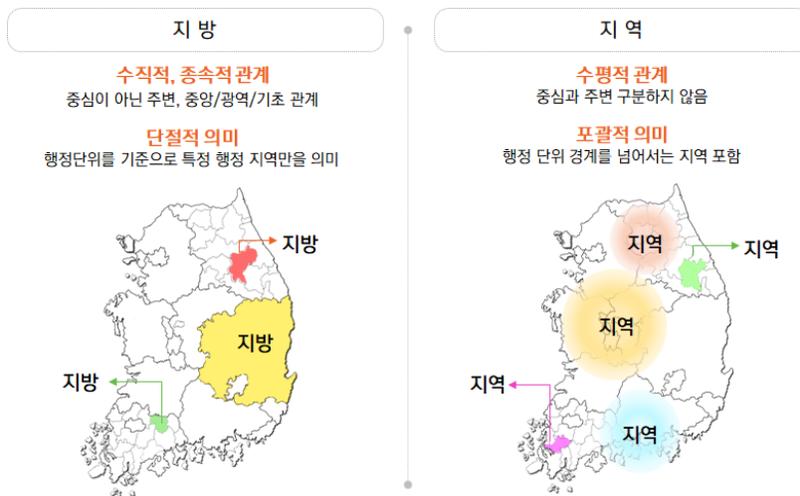
I. 지방소멸시대에서 지역중심시대로

앞서 언급한 법 및 계획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 등의 요인으로 지역 쇠퇴와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제자의 지역현안 지적은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즉 “현재 한국은 ‘지방소멸시대’ 인가? 아니면 ‘지역중심시대’ 인가?” 인구감소와 대도시 중심의 국가 발전이라는 축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중심축이 아닌 주변에 머물수 밖에 없다. 발전의 중심축에 포함되지 못한 지방에서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됨은 자연스런 현상일 수 있으며, 또한 지역발전의 한계로 지방쇠퇴 혹은 지방소멸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발전이 지역의 균형발전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방쇠퇴 혹은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와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은 이제 더 이상 주변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으며, 지역

1)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유의 역사성, 장소성, 정체성을 찾아가며 지역중심시대의 주체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 먼저 지방대신 지역이라는 용어의 적극적 사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지방’은 “어느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지역,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지역’은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으로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사회 통념상 ‘지역’이라는 용어보다, ‘지방’이 중앙 혹은 중심에 대비되는 주변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이해되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서울이 아닌, 서울 이외의 주변으로서 지방’,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로서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서 지방’이라는 의미와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 자료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11.

[그림 1] 지방 vs 지역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라는 수직적 행정조직의 근본적 속성에 따라 중앙과 주변의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관계를 당연시하고 지속한다면, 이는 국가발전의 보이지 않는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본적 수직관계를 허물 수는 없지만, 국가발전이라는 큰 방향을 고려한다면,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은 필수조건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시대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 ‘지방’이라는 단어 대신 ‘지역’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도 ‘지방문화’가 아닌 ‘지역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듯이, 현재의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원진흥법」으로 조속히 개정하고, 법 개정과 함께 기존의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용어 혹은 명칭 변경이라는 형식적 변화는 실질적이며 내용적인 변화와 함께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형식적 변화와 내용적 변화의 우선순위는 없을 것이다. 다만 내용적 변화가 증장기적인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가능한 형식적 변화를 통하여 내용적 변화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가속화시킬 수 있다면 형식적 변화는 긍정적 요소로 먼저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지방소멸의 시대’가 아닌 ‘지역중심의 시대’에 문화원의 역할과 비전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지역문화원으로서 중점 추진과제'

지방문화원이 아닌 지역문화원으로서 주요한 역할은 지역의 주체성, 자율성 제고일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를 발굴, 보존,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가치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재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 발전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전략 1. 지역문화자원 플랫폼 구축”의 “정책과제 2. 지방문화원을 지역학의 거점으로 육성”일 것이다.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 즉, 지리적 공간과 그 공간에서 비롯되는 역사, 문화 등과 함께 폭 넓게는 사람들의 삶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역학의 발전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른 지방화 시대의 도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²⁾ 그래서인지, 현재 지역학 관련 연구소 명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적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 모두 해당 광역시도명을 사용한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³⁾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원학연구소, 아산학연구소 등 7곳의 기초지자체 산하연구기관 혹은 대학(사립/국립)에서 행정적 지역명을 사용한 지역학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역학연구소 혹은 연구센터 등을 통해 지역학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학연구소가 있는 곳은 7개로 나타났으며, 2021년 8월 기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 중 119개 문화원이 지역학연구소, 향토사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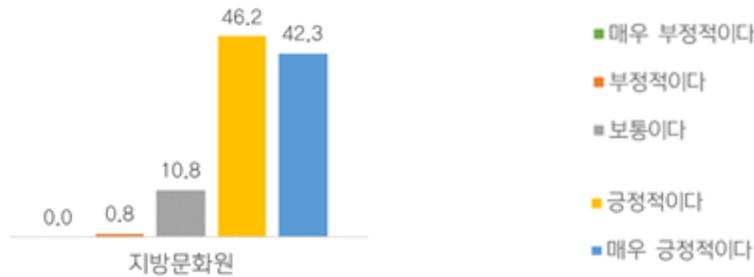
지역학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학연구소를 새로이 설립 운영한다는 것은 시간적, 행정적, 재정적 등 여러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230개 지방문화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중 119개 문화원에 이미 지역학 관련 연구소 및 관련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검토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문화원의 지역학 거점 역할 관련 인식조사 결과(2021. 6), 지역학 거점으로서 문화원 역할 확장에 대해 88.5%가 긍정적(긍정적이다+매우긍정적이다)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의 91.5%가 지역학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90.8%가 사업 수행 경험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김병철, 강원학 정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강원개발연구원, 2000./김남용, 김두만(2017), ‘의정부학 정립을 위한 추진방안’, 의정부시 제4기 행정혁신위원회 2017 상반기 연구과제 보고서, p.383, 재인용.

3) 17개 광역시도 중 대전·세종과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지역학 연구소(대전세종지역학연구소, 대구경북학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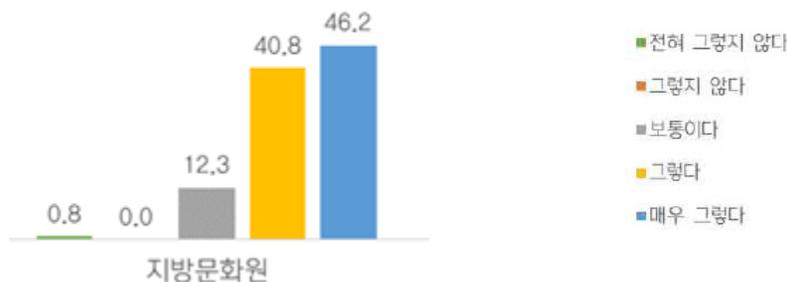


* 자료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70.

[그림 2] 지역학 거점으로서 문화원 역할 확장에 대한 인식

또한 87.0%가 지방문화원 정체성과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이 부합한다(그렇다+매우그렇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과 지방문화원 정체성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의 충분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대상 FGI 결과 (2021.7)에 따르면, 지역학 거점으로서 지방문화원의 장점으로 ‘지역주민과의 접근성’, ‘축적된 지역자료 및 풍부한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단위 : %]



* 자료 :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지방문화원 지역학 거점 육성에 관한 연구, p.72.

[그림 3]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과 문화원 정체성 부합에 대한 인식

인식조사 및 FGI 결과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 내 지역학 관련 연구소가 설립목적으로 ‘지역과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와 지역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문화, 민족문화 도모’, ‘전통, 향토 의미를 현재, 미래로 확장하여 미래까지 제고 도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원은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 확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문화원이 지역학 거점으로 역할을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향토 관련 조사 연구 등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사 혹은 일상의 기록을 위한 활동으로 문화원의 역할이 확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원은 지역의 과거만이 아닌, 현재를 기록함으로써 지역을 만들어 가는 실천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학 연구기관, 연구자 등을 이어주는 지역학의 매개

자료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원은 우선적으로 지역학에 내포된 지역의 중요성이 궁극적으로 지역간 수평적 관계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지방이라는 용어가 지닌 수직적 종속적 의미를 벗어던져야 한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이 아닌 지역문화원으로서 지역학 거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향토사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 등에서 지역학연구소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이 지역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민기록자 양성과 마을기록관 설립 운영을 통하여 지역문화원의 지역학 거점으로서 역할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분권, 문화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원이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지역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은 이제 고려와 검토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접근과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소멸시대’의 ‘지방문화원’이 아닌 ‘지역중심시대’의 ‘지역문화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지역다움’의 창조와 공유”라는 비전의 실현을 꿈꾸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토론 2-2

지방소멸시대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과제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

1. 지방문화원의 위기와 역할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

- 지방문화원을 둘러싼 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 및 지방문화원 스스로 발전 시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 봉착
 - 지방의 위기 시대, 지방문화원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의 지방문화원에 요구되던 기능과 역할이 이제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정립 필요
 - 지방시대에 지방에 사람이 없다? 복합결핍지수(MDI) : 7대 영역진단(시군구단위), 생활SOC결핍지수(LDI) : 수요-공급진단(읍면동단위), 시설별 공간결핍지수(SDI) : 인구분포와 시설거리를 반영한 시설의 공급 사각지대 시뮬레이션 등 분석 결과,
 - 복합결핍도 MDI상위 10% 가장 양호지역은 서초, 의왕, 세종 등 도시지역 비중이 높고, 하위 10% 가장 결핍한 지역은 강원, 경북, 충남 등 농촌지역과 일부 광역시 원도심 지역, LDI와 SDI를 활용하여 생활 SOC우선 지원이 필요한 지역 판단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 필요...(이영주, 2022)
 - 연차별 인구 데드크로스의 지역적 확산이 지속, '인구감소지역' 지정, 향후 10년동안 매년 1조원씩 '지역 구하기 정책'이 추진
 - 고령자 증가, 자연인구 감소, 청년인구 유출 지속 및 유입 인구 감소 현상 심화
- 코로나 상황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장기화로 문화시설 찾는 방문객 감소, 비대면 문화 수요 증가, 이에 대한 대응책 미비
 - 2021년 기준, 국내 문화시설 총 1,814개, 이를 6개 유형별로 구분하면 공연시설(663개), 지역문화활동시설(646개), 전시시설 (253개), 종합시설 (197개) 등
 - 지역별로는 서울 741개(40.9%), 경기 217, 부산 113, 대구 81, 경남 73, 강원 67, 전북 64, 대전 64, 인천 57, 경북 65, 충남 54, 전남 51, 광주 49, 충북 37...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전체의 56% 차지하고 있는 상황, 비수도권의 지역단위에서 문화 향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230개의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참고자료〉 1. 문화시설 방문객 Top 10

1위	올림픽공원	서울시송파구	63,653,549명
2위	코엑스	서울시강남구	47,286,797명
3위	서울대학교	서울시관악구	41,479,076명
4위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시광진구	32,468,841명
5위	롯데콘서트홀	서울시송파구	30,904,616명
6위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서울시송파구	28,563,033명
7위	해운대해수욕장	부산시해운대구	28,026,391명
8위	롯데뮤지엄	서울시송파구	26,434,967명
9위	백스코 (BEXCO)	부산시해운대구	25,612,053명
10위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울시영등포구	23,971,610명

* 자료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인용(2022.08.17.)

2. 지방문화원의 SWOT 분석 관련

- 231개와 10만6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국 단위의 촘촘한 네트워크(전국적 조직망)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지역민에 대한 평생학습기회 제공 등 강점과 기회요인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음
- 그럼에도 규모의 영세성 및 유사 문화시설과의 경쟁 등 약점과 위협은 늘 상존, 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필요
- 국내 지방문화원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보수적 관료적 운용으로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운용체제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강점(S)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조직망(230, 10만6천회원) • 지역문화 유지·계승·발전의 전통보유 • 설립의 오랜 전통유지 • 다양한 전통공연문화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시설, 재정력 열약 • 전통문화자체의 사업성 부족 • 규모의 영세성 •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저조 • 보수적 관료적 운용
기회(O)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의 향수와 관심증대 • 농촌지역의 평생학습기회 증대 • 다문화사회에 따른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필요성 확대 • 지역 고유성, 전통성의 가치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변화에 따른 예산축소 예상 • 문화예산의 지방이양, 지자체 예산순위에서 배제 • 공연, 전시예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의 비중취약 • 다양한 대형 문화시설의 출현

- 따라서, 장훈박사님 발표문에서와 같이 다양한 SWOT분석의 내용들이 연합회 내부뿐만 아니라 개별 지방문화원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 자체 분석 및 반영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문화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문화원연합회에서 명확히 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받아 지역의 문화원연합회와 개별문화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실제 230개 문화원의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임

3.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재원확충

- 기존의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에 바탕**을 둔 지방문화원의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야 할 것임.
 - 문화원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적자 필연성, 정의 외부성(지역의 위신, 주변 비즈니스에의 메리트, 미래세대에의 영향, 교육적 공헌),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 확대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특히, 모리스의 생활의 예술관(생활 속의 지역문화 창달) 등 제시
- 재원확보를 위한 선결사항으로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고 둘째, 지방문화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셋째, 전통 및 지역문화, 향토사를 발굴, 보존, 발전시킴에 있어 **책임성 인식** 등이 필요함

(1) 1차방안으로는,

- 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의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를 「... 경비를 일정비율 보조하여야 하며,」로,
- ② 제19조의 「...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를 「...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례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경상적 수요사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함.
 - 지방의 문화원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에 인식시키며, 나아가 조례개정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문화원 지원 및 후원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규정하게 함.

(2) 2차방안으로,

-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관련사업소」지원의 근거 강조, 지방문화원 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함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별표 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 분야·부문별 설정기준 개정요구〉

분야	부 문	부 문 에 해 당 하 는 업 무	
		기 존	개 정 요 구
060 문화및관광	061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생략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 (...)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생략 ■ 관련사업소(문예회관,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운영경비 ■ (...) 생략

- 지방문화원 의존재원 비율은, 50% 이상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지방문화원은 법·제도적 예산확보, 지방문화원의 정체성 확보를 통해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문화예술단체와 차별성 확보의 자구책 선행될 때 지방정부로부터 예산 확보가 용이

<참고>

별표 3 지방보조금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② 적용대상 :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 종류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문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자문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문사업보조(자체재원·이전재원) 등

③ 예산편성 원칙

- ▶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격,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별로 편성
 -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 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고,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토론 2-3

지방문화원의 존재가치 - 지난 60년, 그리고 앞으로 60년

이동준(이천문화원 사무국장, uncledung@naver.com)

1. 지방소멸,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의식

발제문의 지역문화 여건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쇠퇴와 소멸, 문화의 사막화와 지역공동체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소멸'이란 말이 최근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한국 고용정보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소멸위험지수, 지방소멸측정지표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해 소멸위험 시군구,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발표하면, 이에 근거해 각종 단체나 언론에서 이를 소개하고 소멸위험에 있거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집중 조명한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틀에 박힌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는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연령별 구성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면 대도시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은 지리적, 공간적 인구이동 추이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방소멸은 빠른 인구감소로 우리가 맞게 될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이제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서 지역인구 감소 대응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아야 한다.

지방소멸이라는 것은 지방의 인구가 어디론가 빠져나간다는 것이고 대도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가속화되어 인구 블랙홀 현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되면 지방의 인구는 급감하게 되고,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극점에 달하는 극점사회가 되면 지방은 대부분 소멸하고 대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도 사라져 결국 대도시와 수도권도 쇠퇴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지방쇠퇴, 지방소멸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도시와 수도권이 도달하게 될 궁극의 도착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 도시는 지방에서 인구를 무한정 공급받을 수 없다. 서울은 지방으로부터 무한정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다.

지방소멸이란 말은 도시중심의 탐욕성을 드러내는 관점일 수 있다. '낙후지역'도 마찬가지다. 낙후지역은 개발에 상대적으로 뒤쳐진 지역인데 이 용어 자체가 그 지향점에 있어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나 기업을 유치해 도시지역으로 도약하지 않고서는 정부주

도의 시혜적 사업을 통해 낙후지역을 졸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낙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빈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의 관점 이전에 생명이 살 수 있는 강, 주민이 살 수 있는 마을과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 ‘쇠퇴도시’, ‘낙후도시’, ‘소멸도시’ 같은 표현들은 중앙집중적 자본의 관점에서 나온 개념들이다. 이런 정책용어들은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는, 개발에 뒤쳐진, 그리고 곧 사라져버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의미로 전달되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심리적인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같은 불안감은 지역을 지키고 살려보려는 주민들의 의욕을 꺾고 젊은이들에게 내가 사는 지역에 머뭇거리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대도시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부추길 수 있다.

2.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지방소멸’과 함께 ‘지방의 지속가능성’이란 말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다. 아마도 지방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듯하다. 지속가능성은 원래 지속가능한 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개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그 번역어로 이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 말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자원이 그 도시의 개발을 어느 수준까지 지탱해줄 수 있는지 그 한계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란 그 도시를 지탱해주는 환경적 수용범위 내에서 스스로 조절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기후변화 임계점(tipping point) 개념으로 설명해보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그동안 지구의 기후시스템이 지탱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해 균형이 무너지면 지구는 급격한 기후변화 사태를 맞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도시들은 자신들의 도시 한계용량(carrying capacity)을 가늠하고 있을까? 서울은 서울의 자연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인구 수용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있을까? 이미 이를 초과하고 있다면 서울은 스스로 감축, 감량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까? 아닐 것이다. 어쩌면 많은 대도시들이 이미 그 조절능력을 상실했는지 모른다. 우리사회에 인구소멸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가 그만큼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탐욕적인 도시주의, 개발주의 관점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했다. 특히 문화예술계와 지방문화원 차원에서는 향후 재난사회에 대비한 문화분야의 대응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 지방 정부에 의존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지역주민과 접촉면을 넓히며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원 사업들이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멈춰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점 등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의 지점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2021년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문화선언(G20 Declaration on Culture)을 보면 문화와 기후변화 의제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삶의 적응과 회복을 위해 문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역단위의 토착지식, 마을의 복원력은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지역기반의 삶의 양식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문화원이 절감하게 된 것은 이제 문화는 더 이상 무대 위에서 행해지는 공연이나 갤러리의 전시, 행사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문화원이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미션은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서의 일상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자각이 지방문화원을 변하게 만들었다. 지방문화원이 지난 3년간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한 것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동안 새로운 영상매체 문화와 다소 거리가 있던 지방문화원이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문화원 내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된 것도 코로나 시대를 버티고 나가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게 된 대표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지역문화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이다.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지역민의 의견과 의지를 중시하고 지역의 욕구와 의지, 필요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지만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은 여전히 통제적인 방식이다. 말로는 주민중심, 주민자치, 주민밀착형 정책 형성과정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들은 여전히 하향식,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은 중앙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광역시도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는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수준을 평가받는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은 중앙에서 신청을 받아 그들이 짜놓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지역에 배치한다. 전형적인 통제적 전달체계의 흐름이다.

지역 단위의 진정한 문화자치가 실현될 수 있으려면 이런 일방적인 전달체계의 방향을 뒤집어야 한다. 지역이 주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할지, 또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지역에서 수립된 중장기계획이 잘 시행되려면 광역시도는 무엇을 도와야 할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책 형성과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현실과 여건, 지역의 필요를 알지도 못하면서 중앙에서 전문인력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려는 정책보다는 지역이 어떤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양성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지역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향토'를 현재 그리고 미래 관점으로 새롭게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향토 개념을 과거의 역사, 인물, 사건 등으로 한정하거나 단순히 과거, 고향, 애향심, 전통문화의 우수성 같은 것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 인식의 기반으로서의 로컬리티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토대 위에서 지방문화원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면서 지역민의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

지방문화원은 과거 관주도의 공보조직 체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해왔던 점을 상기해보면, 하향식으로 지시가 내려지는 중앙집중적 문화정책에서 지역의 요구와 의견이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은 문화원이 반드시 극복하고 실현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중앙집중적 문화정책으로 통제되는 지방문화가 아닌, 분권과 자치적 관점에서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문화라는 차원에서

경기도 문화원들은 문화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과 논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화원 입장에서 ‘지역문화원인가, 지방문화원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향전환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방문화원에 대한 평가, 지위와 기능에 대한 의견

지방문화원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각이 있다. 첫 번째는, 문화원은 주로 중앙권력이 시행하는 문화정책의 전달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시각이다. 물론 문화원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조직이긴 했지만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문화는 주민자치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문화원이 한 일들은 중앙정부의 지방행정 차원에서 협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문화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과 의도를 매개 보급하는 공보 역할을 해오기도 했지만, 그와 병행하여 향토문화를 지켜왔다고 보는 시각이다.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온 것은 재정적 자립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래도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가기 위해서 문화원이 최선을 다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문화원은 과거의 문화를 보존하고 고수하는 일에 매몰되어왔다는 시각이다. 과거를 현재화하거나 해석하는 작업, 그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급격히 달라진 문화환경과 문화정책을 이행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메인 파트너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요약하자면, 지방문화원은 그동안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만 머물러서 시민들과 잘 소통하지 않는, 장년층과 노년층이 주로 모이는 단체로 각인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1965년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지역사회의 문화계발을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문화사업이란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그 협조하에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 2.향토문화를 계발, 보급, 선전하는 사업 3.외국의 문화기관과의 협조하에 민주우방제국의 문화를 소개, 선전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때 문화원들은 주로 정부와 지자체의 공보관 역할을 하면서 향토문화의 계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1994년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을 위한 독자 법을 입법하기로 하면서 이론 결실이였다. 그동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던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예산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폐지하고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제정 당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원의 주된 사업은 지역의 고유문화, 전통문화, 그리고 향토사와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때부터 문화원은 본격적으로 지역의 문화재, 향토사, 민속행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미지를 굳혔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지방문화원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2011년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인적 역량 부족, 재정 자립능력 부족 등으로 자생력이 약화되어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 지역문화원 조직은 혁신될 수 있는가?

지방문화원은 예총, 민예총 등과 같이 예술인의 권익과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적 문화예술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고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적 문화예술기관이나 시설과도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 문화원은 법적 근거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간기구 성격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원이 관 조직이나 정부 전달체계에 편입된 기관이 아닌,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자생적, 자발적, 자립적으로 제 지위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의 조직혁신을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원의 '자립기반 확립', '조직역량과 리더십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등 세 가지 조직혁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마련과 이를 위한 수익사업¹⁾의 필요성도 필요하나 그에 앞서 지역민 기반의 적극적인 회원운동을 통한 지역문화 저변 확대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조직역량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직원의 처우개선 문제가 주로 제기되어왔으나 이는 일부 과제에 불과하다. 대상 범위를 문화원 사무국 직원뿐 아니라 임원과 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직역량을 위한 주요 과제영역으로는 문화원이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원의 업무를 구조화하며, 문화원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의 문화지형을 읽어내고 지역의 문화현상과 주민의 인식 수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문화원 내부에만 국한되어있는 인식의 범위와 좁은 관점을 가지고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문화를 선도적으로 리드해나갈 수 없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1)지자체와의 의견협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2)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와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접촉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3)또한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 문화관련 기관·단체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의 경험과 지층을 쌓아가는 일은 문화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관련법과, 조례 등 전체 법체계 내에서 지방문화원의 지위와 기능을 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지역문화 현장의 목소리와 지방문화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식 의견수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먼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6. 한문연의 아카이브 및 지역학 지원기능 강화

2017년 한문연은 지방문화원 소장자료 전수조사 및 목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당시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에서 138만 건의 자료목록을 확보하였다. 그중 디지털화 대상자료는 약 40만 건으로,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4년간 8만 여건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였다. 이는 전체 디지털화 대상 자료 중 17% 정도이다. 이런 진행

1)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수익사업을 추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의 재투자 내지 사회환원 등 수익사업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속도라면 앞으로 32년이 걸려야 완성될 수 있다. 한문연은 지방문화원이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부족과 자료관리 체계 미비, 소장자료의 보존공간 및 시설미비에 따른 자료의 소실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방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여타 다른 도서관에서는 확보하지 못한 희귀한 자료이며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향토사 연구자들의 애정과 고민이 담긴 원천자료이다.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제 중에는 지방문화원의 소장자료를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함으로써 향후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큐레이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화하지 못한 32만 건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이내 마무리가 되어야 하며, 40만건에 달하는 아카이브 사업이 끝난 후에는 이를 시각화하고 다양한 창작 프로젝트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발제자가 제시하는 지역생활사 자료 수장고 확보는 이런 맥락에서 한문연의 지방문화원의 아카이브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기능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이에 더하자면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학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문연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시급하다. 발제자가 말하는 중앙지역학연구센터(가칭) 설립은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창립 6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정부 지역문화정책 진단과 지방문화원 비전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발행인: 김태웅

주 소: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도화동, 성우빌딩) 12층

전 화: (02) 704 - 2311

팩 스: (02) 704 - 2377

공식 누리집: 한국문화원연합회 <http://www.kccf.or.kr>

© · 2022 한국문화원연합회

이 책 내용의 전재·복사 등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